

B20 52

전국미군기지되찾기 공동행동위원회

1. 미군기지 반환운동 서설

2. 철저해부 '주한미군'

- 1)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변화와 주한미군
- 2) 미군주둔 51년이 남긴 것 - 주한미군이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악폐를 고발한다.
 - 미군공여지란?
 - 미군범죄의 실태와 원인
 - 또 하나의 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
 - 식민 1번지, 기지촌
 - 현대판 노예, 미군기지속의 한국인들
 - 방위비 분담 문제
 - 한국, 미군주둔비 연 20여억\$ 부담
 - 거세지는 방위비 분담 압력
- 3) 미군기지 실태
 - 3-1) 베일속의 전력, 그 실태를 밝힌다
 - '핫 이슈'로 떠오른 4만3천명
 - 연합사, 64만 한·미군 컴퓨터로 통제
 - 세계전략망과 직결된 용산지하병커
 - 육군2사단, 남침로 지키는 '인계철선'
 - 오산 미7공군으로 북한공군력과 균형이워
 - 극동군사정보의 집결지, 전술항공통제본부
 - 막강 7함대의 원격 엄호받는 해군사령부
 - 미군과 한국군의 연결고리 카투사
 - 3-2)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3-3)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매춘
 - 3-4) 저질·퇴폐 물들이는 GI문화
 - 3-5) '대기업' 미군과 싸우는 한국인 노조

3. 미군기지방환운동이란?

- 1)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범국민운동
- 2) 전국미군기지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사업계획(초안)
- 3) 지역별 미국기지방환운동 현황

4. 세계 여러나라의 미군기지 되찾기운동

- 1)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되찾기운동을 중심으로
- 2) 오스트레일리아: 1998년 미군기지 임대기간이 끝난다
- 3) 필리핀: 미군기지 어떻게 돌려받았나?
- 4) 괌: 독립운동과 함께 벌이는 미군기지 되찾기운동
- 5) 캐나다: "미국에 있는 미군기지도 반대한다!"

1. 미군기지 반환운동 서설

2. 철저해부 '주한미군'

- 1)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변화와 주한미군
- 2) 미군주둔 51년이 남긴 것 - 주한미군이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악폐를 고발한다.
 - 미군공여지란?
 - 미군범죄의 실태와 원인
 - 또 하나의 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
 - 식민 1번지, 기지촌
 - 현대판 노예, 미군기지속의 한국인들
 - 방위비 분담 문제
 - 한국, 미군주둔비 연 20여억\$ 부담
 - 거세지는 방위비 분담 압력
- 3) 미군기지 실태
 - 3-1) 베일속의 전력, 그 실태를 밝힌다
 - '핫 이슈'로 떠오른 4만3천명
 - 연합사, 64만 한·미군 컴퓨터로 통제
 - 세계전략망과 직결된 용산지하병커
 - 육군2사단, 남침로 지키는 '인계철선'
 - 오산 미7공군으로 북한공군력과 균형이뤄
 - 극동군사정보의 집결지, 전술항공통제본부
 - 막강 7함대의 원격 엄호받는 해군사령부
 - 미군과 한국군의 연결고리 카투사
 - 3-2)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3-3)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매춘
 - 3-4) 저질·퇴폐 물들이는 GI문화
 - 3-5) '대기업' 미군과 싸우는 한국인 노조

3. 미군기지만환운동이란?

- 1) 우리땅 미군기지 퇴찾기 범국민운동
- 2) 전국미군기지퇴찾기 공동대책위원회 사업계획(초안)
- 3) 지역별 미군기지만환운동 현황

4. 세계 여러나라의 미군기지 퇴찾기운동

- 1)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퇴찾기운동을 중심으로
- 2) 오스트레일리아: 1998년 미군기지 임대기간이 끝난다
- 3) 필리핀: 미군기지 어떻게 돌려받았나?
- 4) 괌: 독립운동과 함께 벌이는 미군기지 퇴찾기운동
- 5) 캐나다: "미국에 있는 미군기지도 반대한다!"

■ 교양자료집 서설

주한미군은 어떤 존재인가!

오랜 세월 금기시 되어온 질문이다. 이는 '봉건시대 왕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 제기성 질문을 금기한 것과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반백년 동안 우리의 의식을 가위눌러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의식있는 일부 집단의 범위를 뛰어 넘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80년 광주항쟁이후의 치열한 민족자주화운동과 국민의 의식 발전에 1차적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소련붕괴와 냉전의 해체, 북-미관계의 긴장과 변화에 현실적 근거를 두고 있다.

대체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로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와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 두가지 이유는 90년들어 소련붕괴-냉전해체로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 평화체제수립논의로 그 존재이유가 상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진전은 당연히 세계최대의 군사긴장지대인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로 귀결되어야 하며, 옹당 주한미군의 대폭적 감축과 위상재정립 및 수평적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아시아 미군 10만명은 현상유지하고 그 주둔비용은 주둔국의 부담을 확대하여 상쇄하려 한다. 이른바 95년 2월에 미국방부가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하고 미국의 해공군력과 위성첩보능력에 한국군의 종속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의 배경과 이유 등등은 본문에 있는 김창수씨의 글을 참고로 하자)

위와 같은 보고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각인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은 소련과 북한에 대한 대항세력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소련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북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만 주한미군의 위상을 설정하였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있어야 하며, 한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는 청산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겠다 하고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앞서의 논리가 진리가 아닌 단지 상황논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국익을 전세계적으로 관철하는 이유를 그럴싸한 이념으로, 나름대로의 정의로 포장해왔던 것에 다름아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느끼겠지만 현재의 한미관계, 특히 군사관계는 정상이 아니다. 반식민지라 명명하여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정도이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작전통제권은 (엄밀하게) 주한미군이 소유하고 있다. 정보체제도 미국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무기체제도 거의 그렇다. 뿐만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온갖 제국주의적 특권으로 가득차 있다. 무기한 주둔(한미상호방위조약), 필요하다면 무제한 사용(전시지원협정),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비를 확대하며 토지를 비롯한 제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우리 국민들의 사적소유지마저 무제한 징발할 수 있는 권한 등, 이러한 특권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고 필연적인 범죄로 이어졌다.

변화되고 있는 현실과 변화를 거부하는 주한미군의 논리를 점검하기 위해 미군과의 역사를 간략히 되짚어 보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1886)

우리 민족과 미국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첫 인연을 맺었다. 두 나라의 첫 인연은 병인년(1866)에 벌어졌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그해 미국의 사업 선박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교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강경한 쇄국 정책을 쓰던 대원군에게 거절당하자 총을 난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그 미국 배를 불 질러 선원 전원을 죽였다. 이 사건을 전해 들은 미국은 청나라 주재 로우 공사에게 조선과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그래서 로우는 1971년 군함 6척으로 12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경기도 남양만으로 쳐들어왔다. 당시 미군은 협상을 요청하다가 거절되자 공격을 개시하여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으나, 끝내 조선 정부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물러 갔다.

카스라-태프트 밀약

미국정부의 태프트와 일본외교부의 카스라가 1904년에 만나 "조선은 일본이 점령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점령한다"는 상호 합의하고 지지한 밀약문서이다. 조선의 일본함방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에서 실현되었던 것이다.

맥아더 포고령 1호와 미군정(1945-1948)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미군의 핵무기 폭격을 받은 일본이 10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은 끝났다. 그러자 조선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조선총독부는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와 곧바로 정권이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8월 16일 갑자기 조선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리고는 곧바로 경찰관서, 신문사, 학교 등을 다시 접수했다. "인심을 교란하고 치안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일본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바로 그날 미군 선발대가 극비리에 서울에 와서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모든 체제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여, 정식 항복 때 일본의 통치 기구를 그대로 미군에게 인도할 것"을 조선 총독부에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 9월 6일 미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대장은 하지 중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군을 조선에 진주시켰다. 맥아더 대장은 바로 이튿날인 7일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보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 점령군(미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는 엄벌에 처하겠다. --- 영어를 공용어로 하겠다. ---"는 내용의 이른바 <맥아더 포고령>을 선포함으로써 미군정을 시작하였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이땅에 처음 발을 디딘 그날, 이를 환영나간 부두노동자 등 9명이 미군을 호위하는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사상하였다. 미군과의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미군정은 이후 한국의 자주적인 조직들을 해체하고 탄압하며 분단을 고정화하고 친미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후견인의 역할을 마친 뒤 49년 군사고문단을 남겨놓고 일단 철수한다.

한국전쟁과 미군(1950--현재)

1950년 한국전쟁 발발후 1주일만에 대규모의 병력이 파견된 이후 지금까지 미군은 앞서말한 두가지 이유를 들어 여러가지 부침을 경과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위와같은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면 미군의 해외주둔(한국주둔)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국익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주둔의 근거와 역할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도 우리민족의 이익과 의사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

먼저 한미간의 불평등한 거의 식민지라 명명해도 될 정도의 관계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작전통제권은 회수되어야 하며, 한미행정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전시지원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미군의 무기한 주둔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최소한 개정되어 주둔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주둔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주둔지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국민에게 납부해야 한다. 냉전이 해체되는 시점에 광대한 미군기지는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결국에 외국군대로써 미국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몽고군, 일본군, 청나라군 등 역사적으로 모든 외국군대는 자신의 국익을 수호하는 패권자일 수 밖에 없었다. 양쪽의 국익이 일치하여 주둔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극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군이 주둔하는 두가지 근거는 상실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조정자, 균형자'라는 새로운 논리로 10만 미군을 계속 주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군축과 통일의 관점에서 지극히 부정적인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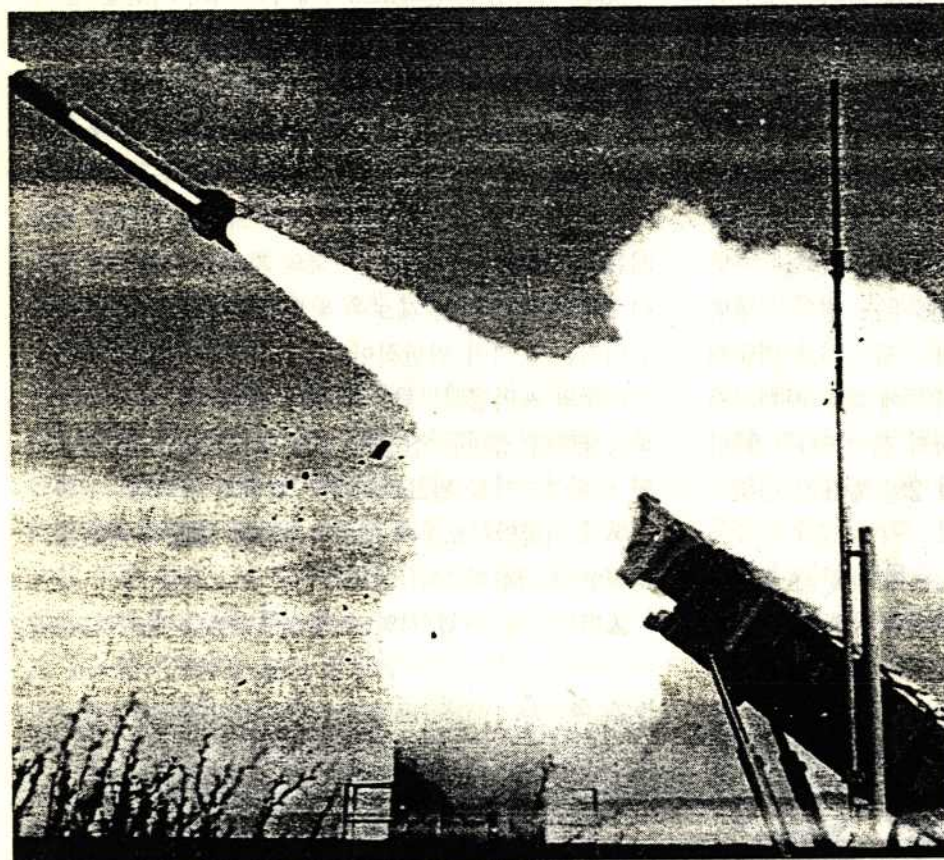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 민족은 냉전이 해소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현 시점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군축을 실현하고 한미관계, 특히 군사관계를 정상화시키며, 자주권을 실현할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1백년에 한 두번 찾아오는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애국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된 것이다.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 자주권의 실현을 기원한다.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공여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1904년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기 직전 대한제국과 밀약한 한일의정서 중 4조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와 주한미군



3년간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이유로 ▲2-3년이 지나야 북한의 핵시설 해체 가능, ▲북한군의 3분의 2 이상이 휴전선 부근에 진진배치, ▲경제가 심각한데도 군비추가 증강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다른없는 미국방부의 인식은 북한위협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전에 미국의 강경세력에 의존해온 한국의 보수세력들을 달래는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방부의 정책이 대북관계 개선을 우려하는 남한의 일부세력들을 달래는 차원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한미군으로 의미되

는 미국의 힘의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소련의 붕괴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안정적인 질서재편을 위하여 힘의 구사를 유연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내부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이든, 미국의 이익확보라는 목표를 위한 가능한 정책을 폭넓게 선택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이렇게 탄력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소련의 붕괴 이후 유일강대국으로서 누리는 특

김창수 통일맞이 칠천만 거레모임 자료실장

95년 11월 3일에 끝난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국이 '향후 2-3년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이 87-88년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이 높을 때라고 하였고, 노태우 정권은 92-93년이 북한의 침략가능성이 높을 때라고 한 것과 같이 권력교체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다소 의도성이 있는 발표로 보인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참가한 페리 미국방장관은 2-

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소련의 붕괴라는 전략전 환경의 변화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군사전략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과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힘의 정책이 어떻게 변함없이 지속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러한 인식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전략변화

미국의 전략은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봉쇄전략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의 본토를 적의 직접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 본토가 아닌 전방에서 소련과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한반도나 다른 지역에 병력을 전진배치해온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 십만명의 병력과 장비를 부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시점에서 미국은 심각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말해 미국의 전략변화는 소련의 위협이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미군의 전진배치에 따른 비용증가와 미군주둔에 대한 보편적인 반대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변화는 90년의 국방부 연례보고서와 91년 8월 2일 발표된 신방위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의 핵전력은 소련의 주요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보복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완

수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전력은 선제공격 후에도 잔존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확성과 막강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990년 미국방부 연례보고서)

“미국은 이제 소련과의 사전경보기간이 짧은 전면전쟁의 위협에 대처하기위한 필요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 국방의 우선과제는 변화해가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지역분쟁이 국방계획에 있어서 주요한 초점이다” (신방위전략 91년 8월 2일)

90년 미국방부 연례보고서에서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주적이 소련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련의 선제공격에 대해서 핵무기로 효율적인 반격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91년의 신방위전략의 핵심은 국방계획의 중점이 소련의 위협대처에서 지역위협대처로 이행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는 유일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련을 대신하는 새로운 위협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지역방위전략은 클링턴 행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클링턴 정권은 신정부 수립 다음해인 93년 9월 1일 국방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시정권의 지역방위전략을 이어서 미국안보장에 대한 4가지의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점검했다.

▲지역적인 위협(지역의 주요세력이나 윤리적 종교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주한미군.



적 마찰에 의한 분쟁) ▲대량살상무기의 위협(핵무기나 화생방 무기의 확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구 소련과 기타 국가의 민주개혁의 실패) ▲경제에 대한 위협(강하고 성장하는 미국경제 구축의 실패)이 그것이다.

클링턴 행정부의 전략은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이 미국전략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여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탈냉전기 미국 군사전략의 기본방향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미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미군을 배치시키고 동맹국가와 군사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운영방식과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다. 군사력의 운영방식에서는 미국 내에 주둔하는 신속 대응군을 위기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병력의 규모에서는 세계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총병력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미국의 전략변화는 신속배치군의 중시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압력의 강화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 본토에 배치되면서 주력군 감축과 군사력의 분산배치경향을 보완하기 위한 편제로서 신속배치군(Rapid Deployment Force)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신속한 증원능력과 윤택한 기동력을 갖는 신속배치군의 경우 감축은 커녕, 오히려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91년 당시의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은 “미지의 불확실한, 어떤 예기하지 못한 위협, 어떻게 해도 그것에 관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돌발사태, 어떤 예측하지 않은 저수준의 분쟁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 유연성, 신속성, 살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긴급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혼성 부대가 필요하다”고 하여 신속배치군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신속배치군의 중시 때문에 미국 육군의 '경사단'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미 육군은 기갑·기계화사단 등 기존의 '중무장' 사단을 기동성을 중시하는 경무장 보병사단인 '경사단'으로 바꾸어 가는 중이다.

클링턴의 신안보전략과 주한미군

허점 투성이 원-원 전략과 미국의 딜레마

클링턴 행정부가 등장한 이래 미국방부는 탈냉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수립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 국방부는 탈냉전의 변화된 환경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을 골격을 마련하였다. 93년 9월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에스핀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구상은 '상향식 평가' (Bottom-Up Review : BUR)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구상에서 미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불확실한 국제정세속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써 ▲핵확산에 따른 핵위협, ▲지역분쟁에 따른 지역적 불안정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혁에 대한 위협, ▲미국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꼽고,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미국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미국은 해외에 전진배치된 미국병력을 통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미국의 상품과 아이디어가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BUR의 백미는 미국이 두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동시 승리전략' (Win-Win Strategy)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두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개의 지역은 중동과 한반도이다. BUR에서 밝힌 동시 승리전략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에스핀이 처음부터 이런 구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에스핀은 애초에 '승리-저지-승리 전략' (Win-Hold-Win Strategy) 전략을 구상하였다. 중동이나 한반도에서 동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 지역에 주력군을 파견하고 그 지역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 다른 지역에 주력군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애초의 구상에 따르면 한반도보다 중동이 우선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으면서 에스핀은 한반도도 중시하는 '동시 승리전략'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원원전략의 수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클링턴 행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삭감하기 위하여 병력을 냉전의 절정기이던 1985년의 215만명에서 1995년 이후에는 146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군사비 역시 80년대의 3,000억달러 수준에서 1997년까지 2,447억달러 수준으로 줄여서 이를 기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93년의 '상향식 평가' (BUR)는 이러한 병력의 양적 감소 계획 때문에 애

초에 '두개 지역 동시승리 전략'이 아닌 한개 지역에 군사력을 우선 투입하는 '승리-저지-승리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상향식 평가' (BUR)에서 밝힌 '두개 지역 동시 승리 전략'을 미국이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미국의 군사력 수준으로는 두개 지역에 동시에 주력군을 파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비판의 요지이다. 더구나 두개의 지역에 동시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모든 수송능력은 첫번째 분쟁지역에 완전히 투입되므로, 미국은 다른 지역에 병력을 투입할 수송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병력은 줄이면서 해외주둔 병력은 줄이지 않겠다는 조셉 나이 국방차관보의 구상 역시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와 주한미군 장기주둔 계획

이러한 에스핀의 구상은 94년 9월에 개입과 확산을 골자로 하는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의 기초가 되었고, 국가안보전략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가장 우선해서 95년 2월에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략보고' (EASR)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미군감축을 골자로 한 1990년의 '동아시아 전략구상' (EASD)를 전면 수정하여 '10만명 수준의 미군을 지속적으로 전진배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95년 2월말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 안보보고서 (EASR)] 가운데 한반도 관련 사항의 핵심내용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장기주둔',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강화', '미국의 해공군력과 위성첩보능력에 한국군의 중속 심화' 등이다. 클링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차례에 걸쳐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90년대 후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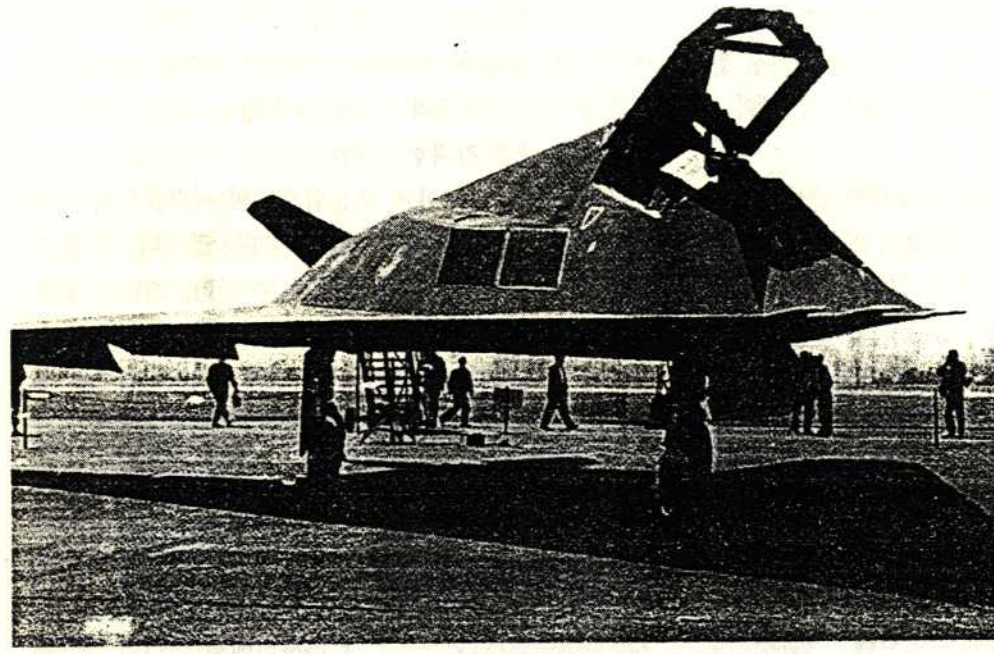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보고서는 탈냉전 이후의 미국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질서 수립과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것을 보다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국제정치학자 출신의 조세프 나이 국방차관보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이 차관보는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 등이 강대국의 흥망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쇠퇴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미래를 주름잡을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가진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클링턴 행정부가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기본시각이다. 클링턴 대통령은 여러차례 미국의 교정책이 신고립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클링턴 행정부는 구 사회주의권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인도주의적인 과제를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국제주의적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클링턴 행정부의 견해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신고립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은 국제기구중심의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자유엔, 反평화유지'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미국은 극히 제한적인 국제분쟁 이외에는 모든 국력을 국내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나이 차관보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역할축소와 국내문제 집중이라는 견해에 반대하고, 미국이 신국제질서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 차관보의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동아시아 안보보고서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



책은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EASR은 이러한 미국의 의지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이다. 그러므로 EASR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개입(Engagement)' 과 과거 비우호국 및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해나가는 '확대(Enlargement)' 전략을 병행 구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입과 확대를 통하여 향후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전세계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이 담당했던 역할을 수행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93년에 미국과 아태지역의 교역량이 3천7 백40억달러이며, 이는 미국 국민 2천8백만명의 고용효과를 지닌 것으로 볼 때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과 확대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을 포기할 분명히 하였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 미국의 이번 보고서에 나온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을 포기하고 현수준을 상당기간 지속한다고 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과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의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 한미양국의 역할분담, 한국의 방위비분담 등 세가지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더라도

서 해외 주둔미군의 장기간 주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안보보고서에는 미군 주둔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이 밝힌 이유는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공약의 실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지역안보대화의 추진,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냉전이 끝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가이익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와 교역에서 미국 국민 2천8백만명의 고용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동아시아 시장을 주시하면서 이 지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에는 미국이 주한 미지상군과 전술공군, 주일 미해병, 해군, 공군, 광의 전략폭격기, 미국 본토 기동전력, 태평양 항공모함 함대로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국은 기능적인 역할분담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대북용으로 지상전력, 일본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전진기지, 싱가포르를 정비지원을 담당한다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상군은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미국은 해군, 공군, 위성 정보분야를 주로 맡는 비교우위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도 [한국군사력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대미의존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어 경계를 요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군, 공군, 군사정보 등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한국군을 현대화, 과학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서 한국 해군도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이 구체화된다면 한국군이 외쳐온 자주국방은 실종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

주한미군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80년대 후반 이후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통일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그동안 정당성을 부여받아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탈냉전의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전통적인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억지한다는 논리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켰다. 한국군의 단독적인 능력으로도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한미 양국은 91년 2월에 있었던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탈냉전의 신국제질서는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이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논리는 냉전시대의 발상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러한 고전적인 세력균형론은 소련이 건재한 상황에서 적대하는 진영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었지, 동맹국

가 사이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었다. 주한미군이 일본의 군사적 진출을 가로막는 세력균형자라는 논리는 일본의 군사화가 미국의 목인이나 지원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미군이 동북아시아에 주둔함으로써 세력균형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명 그러한 기능을 주한미군이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 냉전구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과거 소련 군사력의 동북아에 배치되었던 시절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필수적이다. 세력균형론은 주한미군의 변화하는 역할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냉전적 개념인 것이다.

미국의 전략변화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가져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우리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전통적인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미국의 전략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미국의 핵공방은 냉전시대의 '극한적 힘겨루기'에서 '어떻게 관계변화를 할 것인가'를 놓고 벌였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중단없이 진행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신질서 수립을 의미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의 변화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할과 규모의 변화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를 가져오므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민족내부의 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논리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을 차단하며 전통적인 논리에 머물러 있는 순간 미국의 전략변화에 의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링턴 행정부의 대북한 연착륙정책은 (soft landing)은 9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미국은 적대국가가 아닌 동맹국들과 관계에서는 일방적 강제보다 협의와 동의를 필요시 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의 정치적 동의와 경제적 지원 없는 미국의 단독행동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걸프전에서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강경정책은 일본 등 동맹국가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정

책이다.

미국이 연착륙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클링턴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연착륙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클링턴 행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연착륙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현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개입해서 연착륙시킴으로써 동북아



시아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는 구상과 변함없이 주한미군의 전진배치를 유지하려는 전략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이 과거와 같은 병력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미국은 레이건 정권의 군비확대노선 이후 해마다 3,000억 달러 가량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클링턴 행정부는 군사비 삭감과 병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한미 안보공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보장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의 전진배치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요구를 통해서 억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91년 1억5천만달러, 92년 1억8천만달러, 93년 2억2천만달러, 94년 2억6천만달러, 95년 3억달러로 증가해왔다. 앞으로 98년까지는 매년 10% 씩 인상

하기로 95년의 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북미관계의 개선과 미국의 병력감축 계획은 필연적으로 머지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에 대한 주장이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리처드 홀브루크 미국무차관보는 "미군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10만명의 미군을 유럽에 주둔시킬 것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결국 철수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95.6.22)고 말하는 등 미국관리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이후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시각변화

미국은 과거에는 한국인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통일 이후에도 주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말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리들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주목되고 있다.

전통적인 반미국가인 북한은 냉전시대의 반미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카네기 재단의 셸리그 헤리슨 수석연구원은 지난 9월 19일부터 1주일간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이 제시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말지 95년

11월호 헤리슨 인터뷰 참고) 헤리슨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철수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보장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변화된 입장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존속하는 상황에서도 남북한 간의 연방을 구성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96년 4월 미국을 방문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 역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자로서 역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북한은 몇차례 주한미군의 주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92년 1월에 북한의 김용순과 미국의 아놀드 캔터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고위급 회담을 했을 때 김용순은 캔터에게 일본의 군사화에 대응하는 북미군사관계의 정립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헤리슨이 전한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간다는 방향속에서 북한이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을 통일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규모의 미군을 주둔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개입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미군의 주둔을 바탕으로 한 개입이라기 보다는 경제, 문화, 정보통신 등의 다방면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개입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주한미군의 의미는 그만큼 삭감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 장기주둔 발언은 주한미지상군의 철수(해공군은 제외)를 포함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이 아무리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한미지상군의 장기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변화는 미국의 전략을 관철하는 구조가 온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배양식의 변화일 것이다.

평화정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철군)이 이루어져야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물리적인 기반조성이라는 총체적인 목표 아래 첫

째,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 들쭉,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 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여기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라는 명분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부추키는 주요한 원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역할이 때문에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80년대 이후 즐기차게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관계개선이 된다면 대북 억지력이라는 미국의 역할은 변화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북한이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이라는 역할에 포함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조성을 포기하는 조건에서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간다면 남한정부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화해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주한미군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통일과정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미군사관계를 볼 때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는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 한국의 이익이 통제되어지고 최악의 경우 미국의 국익에 의한 국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가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축소를 단계적 철수와 병행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협상이 진행되어 주한미군문제가 해결의 궤도에 오르기 이전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한국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나 범죄문제, 방위비의 과다한 분담 또는 군사적 긴장의 조성문제, 불필요한 무기의 강압적인 판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장악, 한미 전시지원협정 등 불평등한 조약 등이다. 이러한 모순과 일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될 때 통일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군 주둔 51년이 남긴 것

주한 미군이 우리사회에 끼치고 있는 악폐를 고발한다

조재학 주한미군범칙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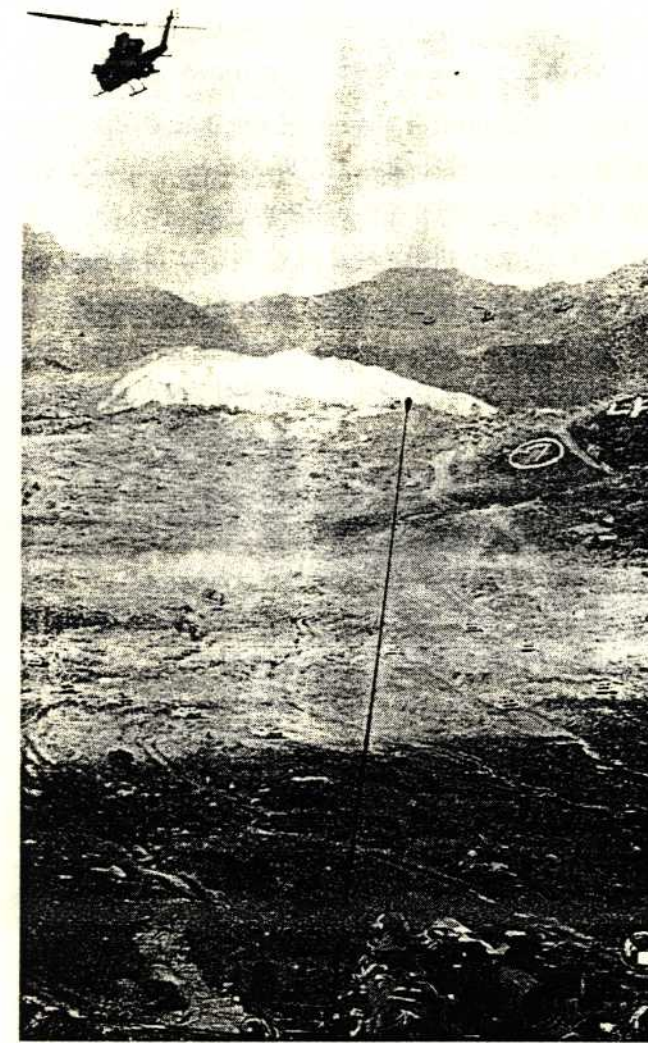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미군 주둔 51년을 맞이하고 있다. 어쩌면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존재일런지도 모른다. 5,6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미군을 접해왔고 또 지금도 일상에서 심심치않게 미군들을 목격하면서 미군의 영향력안에 살고 있다. 미제 초콜렛, 음료수, 맥주, 전자제품, 포르노 잡지 등 살아오면서 미제 물품 한 번 안먹어보고 사용안해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각과 이성 상당부분 마비되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어도, 동두천, 의정부를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등 전국 어디를 가던 널려있는 미군기지를 봐도,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권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을 묵도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다. 적어도 주한미군에 관해서만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적인 것으로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나 알 듯이 주한미군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경제적 특혜의 규모는 엄청나다.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의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도산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



미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실험장으로 변할 수 있다.

겨진 지 모르고 수십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미군 공여지 무엇이 문제인가?

미군 공여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동두천 석목 마을의 주민들이 그러했듯이 엄연히 국민들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행정협정을 통해 미군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다. 즉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과 미군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상호 대립,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조항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서 개인사유지를 징발하는 경우 적절한 법률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가 미군 공여지로 양도된 경우의 상당수는 1) 적법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 사용하고, 거기에는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 주한미군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선진대국과 세계화의 구호가 요란한 21세기의 직전에서 주한미군의 실상을 살펴보자.

주인도 모르게 미군에게 넘어간 '미군 공여지'

<사례 1>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어느날 갑자기 쫓겨나게 된 농민들

지난 3월 15일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마을에 미군이 사격장을 짓겠다고 조상대대로 살고 있던 땅에 탱크를 배치하고.....토지대장에도 분명히 농민들의 소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조건 마을을 나가라니? 이유인즉 그곳이 미군 공여지(供與地)기 때문에 미군에게 사용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나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땅이 미군 공여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군 공여지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보상도 없이 한술 더 떠 4월 23일자로 동두천시에 공문을 내려보내 쇠목마을을 포함 인근 6천 4백평을 조속히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례 2>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미군 공여지'니까 철거하라!

국제 케미칼(대표: 이신연)은 피혁원단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두천시 미2사단 인근에 95년 3월 완공예정인 공장을 건축했다. 7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95년 2월 돌연 국방부로부터 건물 철거지시가 내려왔다. 국방부의 설명은 '미군 공여지'라 미군당국에 사용권이 있고, 미군측에서 철거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국제 케미칼은 1년여동안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외국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중국의 제2공장 건설 계약이 불이행되었고, 기술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최근 국제 케미칼 측은 공여지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국방부 등에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로 "언제라도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즉각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공장 건설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96년 4월 23일자로 동두천시에 재차 철거를 요청해와 그 처

리가 주목되고 있다.

<사례 3> 미군의 전선 때문에 기형이 된 건물

동두천시 생연동의 땅 소유주가 95년 6월 3층 건물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명령이 내려왔다. 난데없는 철거명령에 놀란 건물주가 그 사연을 알아보니 역시 '미군 공여지'. 건축 부지 위로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고압 동력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미군이 항의하자, 95년 9월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결국 건물주는 공여지책으로 원래의 설계와는 달리 고압 동력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2층으로 변경, 기형적인 건물이 되어 버렸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집이나 땅을 살때는 그 위로 미군의 전선이 지나가지 않는지 먼저 살펴봐야만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미군 공여지(供與地)란?

'미군 공여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에 있어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미군 공여지에는 미군기지과 시설을 포함해서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되며, 미군 공여지는 다음에서 보듯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미군공여지	
전용 공여지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예: 미군 기지, 훈련장, 기타시설 등)
지역 공여지	원래의 토지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땅으로 일종의 그린벨트 개념 (예: 사격 훈련장 안전지대, 미군 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땅)
임시 공여지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

최근에 미군 공여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미군기지밖에 존재하는 미군 공여지 실태가 일부 공개되면서 부터다. 그동안 국민들은 미군기지에 대해서만 인식했지 미군기지 외에 미군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지, 그리고 미군 공여지의 개념조차도 몰랐다. 앞서 말한 동두천 쇠목 마을 등은 바로 미군 공여지로서, 쇠목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게 사용권이 넘

것은 물론 2) 아무런 소유주에 대해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3) 땅 소유주와 해당 관청이 공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

이처럼 부당하게 제공된 미군 공여지의 문제점은 첫째,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현행 징발법도 이같은 취지를 살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징발하는 경우에도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상황 등에 의해서만, 그것도 징발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두천 쇠목마을의 경우 지난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 당시 미군 공여지로 양도하면서 대상 주민들에 대한 통고나 사전협의 일체없이 그리고 배상금 한푼 주지 않고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의 사용권을 미군에게 넘겨준 것이다. 더구나 당시의 상황이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이자 '기본권 침해' 이다.

둘째,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도시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51%인 약 1천 5백만평(미군기지는 250만평)이 미군 공여지여서, 주민들의 생활터전의 상당수가 미군 공여지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도시발전은 물론 사유지에 대한 건축과 시설보수 등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시의 공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다가도 미군측이 항의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야 하고, 미군의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이 원래 설계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지어지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군기지 이외의 미군 공여지가 과연 동두천에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군 기지가 동두천을 비롯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원주, 춘천 등 전국 98개 지역에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미군 공여지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군 공여지 문제는 결코 동두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미군 공여지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동두천에서 미군 공여지의 실태가 공개된 것도 95년 국제 케미칼 공장 건설과 96년 쇠목 마을 미8군 사격

상 확장 계획 등을 통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다. 동두천 시의 경우 최근까지 미군 공여지의 면적, 분포, 위치 심지어는 미군 공여지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 위의 사건 등을 통해서 국방부에 문의한 후에서야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즉 미군 공여지의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 수십년동안 주민들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만큼의 미군 공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분포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신들의 땅이 미군 공여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동두천 쇠목마을 처럼 어느날 갑자기 미군들이 "미군 공여지니까 나가라!" 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넷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주한미군이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미행정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의해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지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미군 기지와 공여지 조성은 1945-48년 미군정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정 시대에는 미군은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일체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했으며,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그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시 철수했던 미군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되자 다시 들어왔고, 이때 한국정부로부터 '군작전지휘권'을 포함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면서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 직전까지 미군기지에 관한 한 미간의 조약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개인 사유지 등 엄청난 땅을 불법적으로 수용하여 현재

와 같은 엄청난 미군 공여지를 확장시켰다.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67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기지에 방대한 규모의 기지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계약이 있어야만 했으나, 한미행정협정 제2조는 1967년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권을 '소급' 인정해 버렸다. 이 조항의 규정은 협정 제2조 1항(가)에 의하여 미군이 기지를 사용함에 있어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한다'는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미군범죄의 실태와 원인

주) 미군범죄의 구체적 사례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례는 생략한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미군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해 보더라도 미군범죄는 줄잡아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2,200여건, 하루 평균 5건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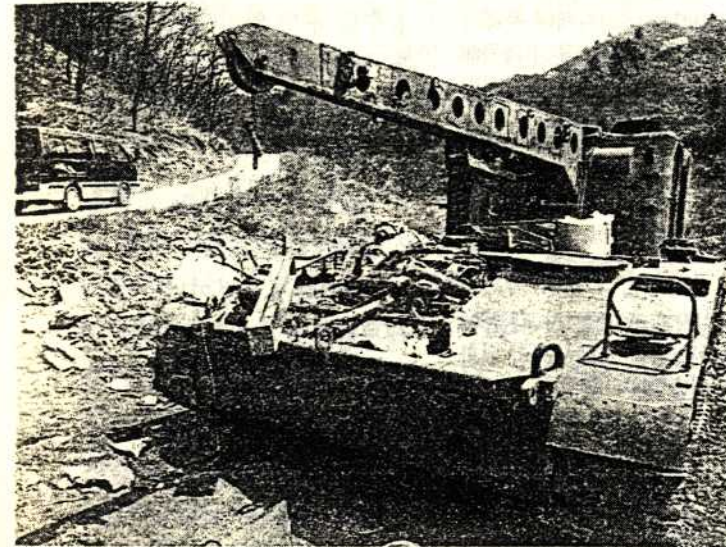
무기를 옮기고 있는 미군.



커버스토리 주한미군 과연 필요한가

최소한 하루 5명의 우리 국민들이 미군의 범죄행위로 이 루 해야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범죄가 거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한국정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미군범죄 중에서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91년 한미행정협정 개정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를



동두천 쇠목마을에 방치된 사격연습용 장갑차.

은 1%에서 맴돌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 1992년 10월부터 1993년 8월까지 현황인데 총 8백 50건의 미군범죄 중 단 10건인 1.17%만이 한국정부에 의해서 재판권이 행사되었다.

그리고 미군범죄 피해자들은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미군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런 절차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설사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절차와 규정이 복잡해 실제 피해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당장의 치료비조차 없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몇푼 안되는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미군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절도, 밀수, 마약, 방화 등 온갖 종류의 범죄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군범죄는 이런 직접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포, PX 불법유통을 통해 거대한 암시장의 형성 등 광범위한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와 있다는 생각으로 오만방자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민을 멸시하고 한국민의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군들의 범죄동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살인, 폭행의 경우 가장 많은 이유가 '아무 이유없이'라는 것이다. 즉 미군은 아무 이유없이, 공연히, 사소한 시비 끝에 한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폭행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미군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미명아래 아주 공격적으로 교육, 훈련되고 있다. 미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주력 미 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주한미군들 대부분이 사회하층이고 저질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미군들 중 상당수가 할렘가 등 빈민가 출신이고,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

이런 미군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미군 범죄자를 대하는 미군 당국의 태도이다. 주한 미군 당국은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해야 될 미군에 대해서도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처리하고 있다. 그들에게 미군 범죄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해 주한 미군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 '미군들의 사소한 문제' 운운하였다. 그리고 윤금이씨 살해 사건 때 '윤금이 공대위'가 공개 사과와 범죄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대해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리스카시(Robert W. Riscassi)는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당당히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의 일환으로서 미군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이상에 달하는 우리의 우방 관계를 통하여 실로 수십만 명의 미군들이 대한민국의 방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과 가정을 떠나 이곳에 왔으며....."

한국민들에게 이토록 오만한 미군이 지난번 오끼나와 국교생 성폭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인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나 모욕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일본은 주권국가! 한국은 식민지?

	일본 지난해 주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국교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취한 태도.	한국 92년 윤금씨 살해사건, 10만건이 넘는 주한미군범죄를 대하는 미국측의 태도
주일미군사령관 / 주한미군사령관	"이 끔찍한 비극은 인간성에 반하는 포악한 행동으로 미군 제복을 입은 우리 모두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총무로 지하철 난동 사건 등에서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미군의 사소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주일미국대사 / 주한미국대사	"피해자와 가족 오키나와 주민에게 깊이 사죄한다(피의자인 미군들과) 같은 미국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주한미군범죄는 범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이 왜곡해서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인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거나 모욕도 무시하지 않을 것"	없음
기타관리들	마이클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 "미국 정부는 극히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가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중"	페리 미국방장관 "우리는 한미관계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취한조치	주일미군의 훈련을 하루동안 중지하는 '반성의 날'을 선포 오키나와 주둔미군 오키나와 주민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토론 등의 2일간의 공식 "반성의 날" 행사	51년동안 한번도 없음

그리고 미군 당국은 입만 열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준수'를 외치며 한국 정부의 처벌권을 가로막으면서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미군당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와는 정반대로 한국 정부는 무기력 하기만 하다. 한국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0.7%의 재판권행사율은 한국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일선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피해자들을 무마하기에 급급하며, 심지어는 신고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또 재판권행사에 있어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경미하다 하여 재판권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기소되고 엄중처벌되는 사건이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으로 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

가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외교상의 마찰을 일으켜 한국의 국가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부분은 감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한국관리의 말은 한국정부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미행정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의 수많은 불평등 조항에 의해 미군들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그 불평등성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 1991년에 개정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본문과 합의의사록은 손대지 않은 채 하위규정인

양해사항만 부분적으로 개정된 '껍데기 개정'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거의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나 이것도 다른 독소조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22조의 대표적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 합의의사록 제22조 7항: 미군의 행정벌이나 징계가 효과적이므로 미군당국이 요청하면 한국의 전속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점.
- 합의의사록 제22조 3항: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정부의 1차적 행사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점.
- 본문 제22조 5항: 미군범죄 피의자의 경우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정부가 구금할 수 없도록 한 점.
- 본문 제22조 7항: 한국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에서 복역중인 미군구성원의 신병인도를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측은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한 점.
- 합의의사록 제22조 9항: 한국사법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 조항.

또 하나의 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 미군기지 대략 10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땅은 최소한 서울시 전체면적의 절반규모인 1억평에 달하는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미군기지는 대부분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4년 3월 임시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 미군기지 철수 지역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천평),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백 19만평) 등 3곳의 미군 철수지역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캠프 리비의 토양 오염도는 납의 경우 최고 143ppm으로 공원 등 일반지역의 오염도보다 24배나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나타나 일반지역보다 7배나 심하게 오염돼 있었으며, 기지 근처 벼의 사람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캠프 에임즈는 일반지역보다 납의 오염도가 최고 6.1배나 높았고, 캠프 이즈벨은 납과 카드뮴의 오염도가 일반지역보다 각각 최고 9.5배와 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은 미군이 주둔하다가 92년 5월부터 7월사이에 철수한 곳으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993년 3월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 6백여톤의 각종 오,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흘러보내 근처 황구지천의 물고기가 폐 죽음을 당하고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두차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차례 모두 수질오염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60ppm보다 훨씬 높은 112ppm과 121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고발되어야 할 수치다. K-55 미공군기지는 하루 발생하는 오, 폐수 5천여톤 가운데 가운데 3천 4백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1천 6백여톤은 정화하지 않은 채 황구지천으로 흘러보내고 있다.

그리고 1993년 3월 환경처의 확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매년·염화폴리비페닐(PCB), 페타이어, 페운활유, 오일 등 특정폐기물을 수천톤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대부분 국내위탁처리업자를 통해 불법처리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89년 3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의한 바젤협약에 의해 국가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주한미군은 미 국내법에 외국에서 미군이 발생시킨 폐기물은 본국에 가져올 수 없다고 규정과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큰 충격을 주었던 1994년 낙동강 수돗물 오염사건 때에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에서 정화가 안된 생활폐수를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동정천으로 마구 흘러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캠프 캐롤은 낙동강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으며, 정확한 오염 정도는 미군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으나 1일 배출 생활오폐수는 수백톤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온상이자 사각지대로서 존재하고 있다.

왜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그것은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준 한미행정협정과 정부의 사대적인 자세, 미군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다.

한미행정협정은 4조에서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이 협정 6조는 '합중국 군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 하수오물처리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한미군의 하수, 폐기물 등 뒤치다꺼리를 한국정부가 떠맡도록 하는 등 엄청난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저자세도 문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환경오염문제도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없다. 그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이다. 더구나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자 1993년 7월 한미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0월에 상건례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회의를 갖지도 못했다. 게다가 이 위원회의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역할을 양국 정부에 대한 권고나 조언으로 제한하고 있고, 오염실태 등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다. 자신들이 오염을 시켜놓고 한국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송탄 K-55 공군기지의 경우 주민들의 거센항의에 밀려 평택군청 등이 세차레에 걸쳐 시정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되었

다. 미군당국은 본국정부에 정화시설 비용으로 1천 2백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거절됐다며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도 한국쪽에서 적극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다른 미군주둔국에서는 전혀 다르다. 사실 미군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그들이 주둔하는 모든 국가에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1992년 10월 30일자 '유에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보도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1981년 8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작성한 52쪽 분량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10개의 미군기지 에서 미국의 환경법을 무시하고 독성 및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는 주둔국의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해외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라 미국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2곳의 폐기물 처분장 주변 오염정화와 공군기지 송유관에서 유출된 기름을 정화하는데 각각 2천 2백만 달러와 1천 9백 30만 달러를 쓰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앞으로 20년 동안 2백 50억 달러를 들여 미국내 군사기지의 오염을 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식민 1번지, 기지촌

한국에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촌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45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으나, 당시에는 기지촌다운 기지촌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이 다시 오자 기지촌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쟁은 술한 남편과 남자와,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홀몸이 되어 생활능력을 잃은 부녀자들뿐만 아니라 살길이 막연한 수많은 피난민들도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미군부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기지촌은 사회분위기에 따라 변화해갔지만 그 속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군부와 미국의 유착이 진행되면서 미군인들을 위한 군대창녀촌인 기지촌이 양측에 의해 암묵적으로 묵인, 지원되고 관찰,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동두천 주변에는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 소요산의 일명 몽키하우스, 부평에는 제인원 등의 성병수용소가 있었다. 이 수용소에서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

성들 중 성병에 걸려 불합격판정이 난 여성들을 검거하여 미군의관들이 직접 호스타시린 등 항생제를 맞추며 격리 강제 수용하였다. 그것은 여성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 미군 상대의 클럽 입구에는 클럽카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성병검진에 패스한 여성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미군들은 그 번호와 사진을 보고 여성을 고르곤 했다.

또한 여성들은 미군상대 관광회에서 일하려면 의무적으로 월 2회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홀 아가씨들 가운데 보균자가 많으면 OFF LIMIT(미군 출입금지 딱지)를 부쳐 홀을 폐쇄시켜버리곤 하였다. 성병을 보균한 미군들을 처벌하지 않고 여성들만 강제수용하고 미군의관이 직접 항생제를 투여하며, 클럽을 강제폐쇄하는 일련의 행태는 오로지 미군들을 위해서 깨끗한 여자를 바친다는 미군을 위주한 불평등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행정부처인 보건소의 관찰과 미군부대의 개입하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해 놓고도 군대창녀집단의 존재를 가능케하는 중간집단인 매춘클럽의 운영포주와 펌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 더우기 미군들을 위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성병검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정작 보균자인 미군들은 놔두고 자국의 여성들만 처벌하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미군들의 성욕배출을 위한 서비스를 다하였다. 예를 들면, 미군들을 상대로한 클럽에 면세혜택이라는 특별배려를 하여 주었고, 관광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클럽주인들의 해외연수도 시켜주었다. 더 나아가 관변자치회를 두고 미군들과의 폭력사건 발생시 이를 무마하기에 안간힘을 다하였으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더구나 미군에 의해 매춘여성이 강간, 죽임,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수사 한번 제대로 못한채 미군측에 가해자를 넘겨주었다. 즉 양측시 하나때문에 한미관계를 해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설사 여론에 몰려 한국재판정에 미군을 세운다 하더라도 두명의 여성을 죽인 미군에게조차 '우방의 군인임을 참작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더구나 부끄럽게도 지방유지와 행정관리들은 이러한 여성들을 한달에 한번 강당에 모아놓고 '당신들은 애국

커버스토리

자다. 우리를 지켜주러 온 미군들을 위안해 주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다'라고 칭송하였던 것이다. 이는 군사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군대창녀촌의 설립은 박정희 정권 당시 조성된 군산의 아메리카타운을 들 수 있다. 이름조차 주식회사로 사장, 상무, 전무, 경비가 있는 회사체제, 다시말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군대창녀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이다.

타국에서의 지리하고도 무료한 군대생활과 성욕의 분출구를 찾고 있는 미군 그리고 군대의 통솔을 위해 미군들이 성욕을 통제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던 미군당국 그리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와 주식회사 사장의 이윤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요했던 독재정권, 이들이 이해관계속에 실버타운이 건설되었고 그 적색지대(관청에 가면 도면에 적색으로 붉은 줄이 쳐 있다 함)로 한국의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은 흘러들어왔다.

그 기지촌을 통해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미군들이 쏟아내는 추잡한 퇴폐향락문화에 물들어가고 있고, 기지촌은 양키문화의 침병으로 온나라 구석구석에 스며 들고 있다.

현대판 노예, 미군기지속의 한국인들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기업 <엠코>에서 근무하던 우종용씨 등 24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주휴, 월차, 시간외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엠코측은 한미행정협정상 한국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며 아예 재판없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1992년 3월 27일 엠코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엠코측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러한



지난해 충무로 미군 난동이 있고 난뒤 주한미군 범죄를 규탄하는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

주한미군 과연 필요한가

기조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1994년 5월 24일 주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자체 인사규정을 내세워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주한미군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였다. 주한미

군은 "주한미군내의 어떠한 쟁의도 한국 기관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한미행정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 정부에 통고해 온 것이다.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일방적으로 미군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우리 나라의 사법권까지 무시해 버리는 오만한 태도를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불인정하고 거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는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

본 협정 제 17조 3항에는 주한미군은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아래 4항에는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위의 조항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미군 내에서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제 15조 제 3항에는 초청계약자(이번 사건의 엠코 회사처럼 미군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미국회사)는 고용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되어있다. 그리하여 주한미군 측은 15조 3항을 근거로 한국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의 재판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고 그나마 미군측이 한미 우호 관계 운운하며 한국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이번 사건처럼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고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의

교적인 논란만 계속될 뿐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권리를 찾으려 노력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약 1만 6천 명에 이른다. 주한미군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우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근로기준법은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한인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항시 고통받아 왔고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관계로 일년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는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미행정협정의 부속문서 합의의사록 제17조 2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협정에 삽입된 막연한 개념인 '군사상 필요'는 사용자인 미군의 의사대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우리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10년이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재까지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물러 고용관계의 불안정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95년 1월 송탄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대량해고조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내 한인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조건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주한미군이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들을 몇가지 살펴보았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10만건을 상회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군들에게 아무이유없이 살인, 강도, 강간, 폭행을 당했다. 미군들은 대규모의 군사훈련으로 농야와 산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으나 우리국민들은 그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AIDS, 마약, 포르노, 음란기구 등을 통해 저질퇴폐문화를 그대로 유입시키고 있으며, 이런 미군들의 문화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등에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 미군주둔 지역에서는 미군기

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찌꺼기, 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으며, 규모를 알 수 없는 PX불법유통으로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은 [주한미군 작전지휘권의 정치적 위험요소]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군부가 전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회사(自會社)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미정부내에서 의견 불일치가 생겼을 때 적어도 한국문제에 관한 한 군부의 발언권을 절대적이다. 세계가 넓다해도 미국현지의 반대여론에 부딪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이외에는 아무데도 없다.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의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향락 중에는 몇 천명, 몇 만명이라는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

오랜 주둔 역사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주한미군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미군 주둔 50년을 맞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한미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고, 민족민주운동 진영도 주로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주한미군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인 문제제기만으로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실천과정에서 검증된 바다.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는 이처럼 민족자주화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도로서는 물론이고, 미군주둔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사회에서 감히 문제삼을 수 없는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단순한 안보논리로만 주한미군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주둔목적은 무엇보다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는 인식과 민족자주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역'은 허물어 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온갖 만행과 횡포, 폐해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태평양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맥으로 볼 때 정한 이치이다. 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두 나라가 다른 지역의 동시 분쟁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계획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아주 정확한 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주4) 또 24회 서울 올림픽 기간에 동해상에서는 미드웨이호, 니미츠호를 비롯한 미7함대와 일본 해상 자위대가 출동하여 사상 최대의 무력 시위를 연출하였다.

한·미 군사관계는 그 자체가 독자성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망에 하위 체계로서 종속되는 문제인 것이다. '하위'의 부분이 아무리 특별해도 이같은 세계적 규정성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2. 방위비 분담 문제

1) '방위비 분담'의 세계전략적 성격

미국은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과 전세계적 규모에서 진행되는 군사 행동의 강화를 통해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예산으로부터 빼내어 써 왔다. 1980년에 1천4백15억 달러이던 군사비 지출이 1986년에는 무려 2천7백39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1988년에는 3천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출혈 지출의 결과 87년도 재정 적자는 1천4백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렇듯 군사비 지출에 반비례하여 하락하는 경제 때문에 미국은 마침내 '88·89 회계연도의 국방비 예산을 전년에 비해 5백30억 달러 감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전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부대에 즉각 영향을 끼쳐 태평양 사령부의 경우 한국에 있는 미8군이 17퍼센트, 일본에 있는 제5공군이 11퍼센트씩 작전비와 유지비를 감축해야 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요구는 이상과 같은 미국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①전쟁 물자를 사전에 비축하고 ②군사기지를 확대하고 공동 작전을 강화하며 ③해당 지역 내에 전시 입법을 확립한다는 것 등이다.

이로부터 쉽게 알 수 있듯이 방위비 분담의 추구는 총체적인 현지 동원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주4) 『중앙일보』, 1988.6.9.

1988년 4월 29일 미 국방부 장관 프랭크 칼루치(Calucci)는 『동맹국의 공동 방위 기여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계속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앞으로 10년 동안 서방 안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방위비 분담의 추진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카터 전 미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을 지냈던 즈비그뉴 브래진스키도 미국의 상대적 국력 감퇴를 미국의 전후 대(對) 서구·일본 부흥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미국을 대체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과 협력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5)}

미국은 실제로 1988년 5월 태프트(Taft)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방위비 분담 문제 특별반을 편성하여 동맹국을 순방케 한 바 있다. 이같은 추세는 미국이 단순히 예산 부족에 대처한다는 단기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의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위비 분담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어김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특히 대한군사판매차관(FMS)을 졸업한 1986년 이후로는 연례안보협의회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2) 방위비 분담의 법적 기초

방위비 분담 요구는 「주둔군지원(HNS) 협정」이라든가 「전시주둔군지원(WHNS) 협정」과 같은 것을 동맹국에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둔군지원’이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 육군 야전교범(FM)100-5에 보면 그 효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 각국 등 평시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전투지역에서는 사전에 체결된 HNS협정에 의해 전쟁초기에 증강되는 미군의 후방지원조직과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HNS협정은 항만·공항·공수기지의 운영·주요도로·철도·송유관의 관리·통신조직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또 지방 수송기관, 노무자, 지역경찰의 이용에 관해서도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주5) 『한국일보』, 1988.5.4. 참조.

한편, ‘전시주둔군지원’이란 주둔군지원을 전시에까지 연장,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야전교범에 그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①증원부대의 도착 지역 ②전투 지역으로의 이동 노선 ③전·후방의 주둔 지역 ④작전 지역 ⑤작전중의 후방 지역에 대한 병참·통신·보급·수송·치안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전사자 시체 처리 시설·포로 수용소·군 형무소 등을 확보하는 것도 그러한 지원 가운데 포함된다.^{주6)}

미국과 「전시주둔군지원협정」을 맺은 나라는 벨기에(81년 10월), 서독(82년 4월), 네덜란드(82년 8월) 등이다. 덴마크는 이 협정의 체결을 거부했지만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전쟁물자비축협정」은 체결해 주었다. (82년 9월). 그 밖에 룩셈부르크·노르웨이·이탈리아·그리스·일본·우리나라와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서독이 맺은 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9만 3천 명의 예비역을 유사시에 미군 지원을 위해 동원하며 전시에 증원될 미군 전용의 병참 부대를 1989년까지 편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19차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주둔군지원협정에 관한 양해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의 진행을 규정하고 있다. 「주둔군지원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거의 전적으로 미군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부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언젠가는 협상을 통해 구체화할 「전시주둔군지원협정」인 것이다.

3) 방위비 분담의 내용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방위비 분담의 내용은 앞서도 말했지만 전쟁물자 예비 비축(군수지원), 공동 작전 강화, 전시 입법 확립 등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미간에 가속화될 방위 분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합동병참계획(Joint Logistic Plan)」과 「전시비상협정(US·UK Line of Communication Agreement, 1983)」이라는 두 가지 비밀 협정이 있다.

주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뒤에 설명하게 될 연합방위증강계획(CDIP)과 항공 기지 강화 등이 이러한 전시주둔군지원 계획에 해당한다.

「합동병참계획」 속의 '지상방위구역(Ground Defense Area)' 구상에 따르면 영국은 전시에 1백여 개 이상의 자국 군사기지를 미국에 공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산업체 주변에 광역의 방위선을 긋고, 미국이 그 지역안에서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반핵 시위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주7)}

1983년에 체결된 「전시비상협정」은 전시의 추가 비용을 모두 영국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국의 의무 조항이 확대된다는 것을 규정한 협정이다. 이것은 30년간 유지되어온 나토의 병참 원칙(자국의 방위는 해당 국가가 책임진다)을 파기했다는 데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이 협정은 영국 정부가 「비상시권한입법」이라는 전시 입법을 발동하여 10만 명에 이르는 민간 노동력과 물자를 미국에게 넘겨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미군이 60일 간의 증원 기간에 필요하게 될 용역과 물자의 세부 목록에 맞추어 민간 노동력 징발과 작업 할당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영국 정부는 이미 1백 여개의 군사기지를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이상과 같은 일방적인 내용의 협정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받아들이고는 그 이유를 비밀에 붙인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안보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일본도 방위비 부담의 요구 앞에 예외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미·일 공동작전 연구'에 따라 1984년 11월에는 「공동작전계획안」이란 것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안에는 ①유사시 미군의 증원 ②미·일 양군의 지휘 ③통제 방법 ④교전 규칙에 관한 것이 들어 있다.^{주8)}

여기서 '교전 규칙'이란 것은 ①어떠한 사태에 ②누구의 지휘를 받아 ③어떤 부대와 장비를 ④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략지침으로서, 전시의 미·일 공동작전 체계를 미리 다져놓는다는 효과가 있다. 한·미 간에는 1986년 18차 연례안보회의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주9)}

주7) 이와 관련하여 「전시비상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 사령관은 (영국)정부가 미군의 사명과 보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소요 사태를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미군은 미군 사령관이 단독으로 또는 영국 정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미군에 대한 민간인의 소송 제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으며 미군 당국은 배타적인 재판 행사권을 갖게 될 것이다……(허 광, 앞의 글, 75~76쪽에서 재인용).

주8) 「아사히신문」, 1984.12.24.

일본은 더 나아가 1988년 1월의 미·일 군수회의에서 「공동작전계획안」의 일환으로 '미군의 유사시 지원'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다. 이것은 바로 '전시주둔국지원'에 해당하며 전시에 미군의 증원과 군사 장비의 공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헤이즈(Hayes) 미 태평양사령관은 그 해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문제가 '전시주둔국지원'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같은 군수지원협정을 맺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 영국의 「비상시권한입법」과 같은 전시입법이라는 것이다. 89회계년도 『미군사정세보고서』는 "일본에 유사 입법이 없는 한 구속력 있는 (군수지원-인용자)협정의 체결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본에게 전시 입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방위청의 주도 아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유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법」에 자위대가 민간인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기지를 설치할 권리를 규정한다든가, 「의료법」에 의료진을 통제하는 권리, 「묘지매장법」에 전사자의 시체를 임의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는 권리를 덧붙이는 것이 그러한 유사 입법의 내용이다.

그 다음으로는 1989년에 입안될 예정으로 있는 「국가기밀법안」이 있다. 이것은 미·일간 공동작전이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국 군수산업의 유착이 깊어지게 되자 이와 관련된 폭넓은 사항을 기밀로 규정한 법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하는 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주10)}

4) 한국의 '방위비 부담'

남한은 미국이 일본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는 '극동유사시' 전략의 하위 담당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부담의 내용은 미·일의 경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87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실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여기서 직접비란 한미연합 방위비 향상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2억 8천7백60만 달러 가운데에서도 사유지 무상 임대분 약 1억 4천만 달러를 빼면 실제 한국 정부의 지출은 약 1억 3천7백만 달러라고 한다.^{주11)} 20차 연례

주9) 「동아일보」, 1986.1.21.

주10) 「동아일보」, 1984.7.27.

주11) 「심층취재·주한미군 40년」, 「신동아」, 1988.7.567쪽.

방위비 분담 실태

(’87기준, 단위 : 백만달러)

비용요소	내용	간접비	직접비
부동산지원	· 토지, 시설제공	1,050.0	150.0
인력 지원	· 카투사, 노무단 · 경계지원 인력 · 한·미 연합사 및 야전사인력	400.7	7.4
운영유지비 지원	· 미군사지원단 경비 · 한미 연합사 경비분담 · 제공 훈련장 운영등	-	6.6
연합방위 증강 계획 (CDIP)사업	· 한·미 연합군사용 군사시설 건립등 (한국은 시설, 토지 미국은 무기체계, 장비위주 투자)	-	34.2 (연평균)
군수 지원	· 탄약저장관리 · 유류지원 용역비	95.5	67.0
한국군 시설 제공	· 훈련장, 사격장 · 항공 관제지원 · 체신부 전산망 계획	-	21.9
감면혜택	· 관세, 고속도로 통행세, 통신 및 공공요금 할인 등	72.3	05.
소 계		1,618.5	287.6
계		1,906.1	

(출처 국방부 88. 5. 7 민언협, 『말』 24호, 26쪽에서 재인용.)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이 지출을 6천여만 달러 올릴 것을 요구했고 절충을 통해 4천만 달러를 증가하는 선에서 낙착되었다고 한다.^{주12)}

이제 우리나라 방위 분담의 추이를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방위 분담의 요구가 본격화하기도 전인 1984년 6월 제5공화국에 의해 만들어진 전시입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안」을 짚고 넘어가자.

이것은 1982년 제 14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발동되고 「민방위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도 『행정백서』에서 “동원자원을 조직화하고 군민 합

주12) 『한겨레신문』, 1988.6.10.

동 동원자원을 제도화하여 월 1회 산업 동원업체에 대하여 정확한 자원 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며 또 “전시 동원물자 규격과 군수물자 규격을 완화하여 국민 공용 물자 개발을 추진하며 전시 초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시 대비 종합훈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구속력 있는 법의 밑받침 아래 미국은 1976년에 ‘팀스피리트(Team Spirit)’란 이름의 한·미 공동작전^{주13)}을 시작했다. 팀스피리트는 미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세계의 여러 곳에서 실시하는 수십 개의 정기적인 군사훈련의 하나이며 핵 전쟁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이다. 그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팀스피리트 훈련 개요(76~87)

기간	병력	미군의 주요참가 부대*	주요훈련내용
1976 6.10-20	46,000 미군 6000 한국군 40,000		상륙작전
1977 3.28-4.13	87,000 미군 13,000 한국군 74,000	오키나와 주둔 제18전술 전투항공단, 오키나와 주둔 제9수륙양용여단, 제1해병항공단,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상륙작전. 지상공격훈련.
1978 3.7-17	104,000 미군 45,000 한국군 59,000	제25보병사단, 랜스미사일 대대, 광주둔 B52편대,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사단	해군기동훈련, 긴급출격 훈련, 상륙작전,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 도하작전, 랜스미사일 발사훈련.
1979 3.1-17	160,000 미군 56,000 한국군 104,000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제1해병 항공단, 랜스미사일대대, 제7함대, 광주둔 B52편대, 제	상륙작전, 대잠수함작전, 랜스미사일 발사훈련, 출격훈련, 공

주13) 1980년대 들어 공동작전 수행의 측면에서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한반도 우발 사태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권 강화(81년) ② 전략 정보의 교환 확대(82년)
- ③ 주한미군의 상한선 폐지와 하한선 설정 문제 협의 (84) ④ ‘한미정책검토위원회’ 신설(85년)
- ⑤ 작전 계획과 교전 규칙의 검토, 한미연합사의 위기조치반 운영 강화(86년) ⑥ ‘한반도 돌발 사태에 대비한 양군의 상호운용성 검토위원회’구성(87년)

		25보병사단.	지합동훈련.
1980 3.1-4.20	145,000 미군 42,800 한국군 102,000	제25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 해병대, 알래스카주둔 공군,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도하작전, 해군기동 훈련, 지상공격훈련, 상륙작전, 출격훈련.
1981 2.1-4.10	156,700 미군 56,700 한국군 100,000	제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사단, 팜주둔 B52편대, 제7함대.	상륙작전, 도하작전.
1982 2.13-4.26	161,600 미군 61,600 한국군 100,000	제25보병 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사단, 팜주둔 B52편대, 필리핀 주둔 미 공군,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항공모함 기동훈련, 상륙작전, 도하작전, 화력시범훈련.
1983 2.1-4.16	191,700 미군 73,700 한국군 118,000	제7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엔터플라이즈), 팜주둔 B52편 대, 필리핀 주둔 미 공군.	도하작전, 해상작전, 기뢰전훈련, 야외기 동훈련, 상륙작전, 화 력시범훈련.
1984 2.1-4월 중순	207,150 미군 59,800 한국군 147,300	제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 해병대, 알래스 카주둔 공군, 제7함대(항공모 함 키테이호크)팜주둔 B52편 대.	상륙작전, 기뢰전훈 련, 전략공수공중투 하훈련, 전투기 전투 훈련, 도하작전.
1985 2.1-4.30	209,000 미군 62,000 한국군 147,000	제25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 해병대, 제7함대(항공모함 미 드웨이), 팜주둔 B52편대, 알 래스카주둔 공군, 오키나와주 둔 특수부대.	상륙작전, 전략공수 공중 투하훈련, 기뢰 전훈련, 도하작전, 화 학전훈련.
1986 2.10-4.25	209,000 미군 70,000 한국군 139,000	제25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필리핀 주둔 미공군, 팜주둔 B52편대,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상륙작전, 공격작전, 해상작전, 비상이착 륙훈련, 지상공격훈 련.
1987 2.19-5월 상순	한미군 합쳐 약20만.	제25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 해병대, 필리핀 주둔 미 공군, 제7함대(항공모함레이저).	상륙작전, 비상이착 륙훈련, 해상훈련, 해 당군수지원 훈련, 화 학전 훈련.

<출처: 「군사민론」, 52호> *주한미군 제외

또 한국 정부에 대해 전쟁 예비물자의 비축에 관한 분담 요구도 서서히 증대해 왔다.^{주13)} 특히 20차 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선 태프트 미 국방부 차관의 방한에서는 ①페르시아만 미군 활동에 대한 지원 ②필리핀에 대한 다국가 원조 계획(미니마샬 플랜) 참여를 요구해와 한·미 군사관계가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개될 상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 미국의 대한민국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현정부가 그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자주외교를 펼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의 대외전략 하수인 역할을 한다든지, 일본처럼 미국을 등에 업고(원문대로) 민족의 통일보다 민족의 대립을 조장하거나 미국, 일본과 더불어 제3세계 약소국 탄압에 일조한다면 멀지 않아 중동을 비롯한 약소국 민족주의 세력에게 배척될 것이다.^{주14)}

20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방위 분담과 관련하여 합의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현행 「탄약 현대화 협정」의 연장·확대 ②「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③「전시주둔국지원협정」의 진전과 「항공상호협력협정」의 검토

「상호군수지원협정」이란 것은 영·미간의 「합동병참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말했듯이 나토 각국, 이스라엘에 이어 태평양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는 전시 연합 작전을 수행할 때 긴급히 소요되는 유류와 탄약의 수송·정비·보급 등 정비 물자와 용역의 상호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 경우 앞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로 무기 체계와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은 이들을 설치할 시설과 토지를 제공한다. 「항공상호협력협정」이란 앞의 표에서 보이는 '항공관제지원'과 유사시 대한항공(KAL) 항공기의 동원 등을 포괄하려는 의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태프트가 요구한 페르시아만 방위비의 분담은 페르시아만에서 작전중인 미 군함이 한국의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고 그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미 군사관계, 특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방위 분담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20차 연례안보협의회 경우 한국

주14) 「자유언론」, 4호, 1988.5.20.25쪽.

정부는 많은 것을 약속해 준 대신 「방위산업 기술협력 일괄양해각서」에 미국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가 1986년 현재 가동률이 43% 일 정도로 허덕이는 까닭이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인 것을 고려할 때 전쟁무기 제조에 협조를 얻으려는 그러한 각서도 최소한 한국 '정부'에게는 '얻은' 것이 되겠지만 그것도 일본과 비교하는 순간 허망해져 버린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의 군수산업에 참가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등 한국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실상 일본의 대재벌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군사관계 상품 매출액에 비하면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지원금은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밖에 되지 않는다. 주15)

차원을 달리하여 그 나라 정부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한·미 군사관계는 문제가 있다. 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룩셈부르크·포르투갈 등 유럽의 5개국도 이미 자국 내에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이슬란드에는 미군기지가 있지만 그 정부는 1985년 초부터 비핵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스페인도 미군기지를 철거하여 여기서 쫓겨난 F16 미 전투기 72대를 이탈리아로 이전하는 것이 추진되자 이탈리아에서도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일어났다. 그리스에서는 1989년에 미군기지 주둔이 종료된다. 미국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선진국 캐나다조차 일방적인 핵 군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서독에서도 단거리 핵 미사일, 랜스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계획, 탄약 현대화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어디하고도 비슷한 데가 없다. 이것은 한·미 군사관계가 세계적인 일반성의 규정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상당할 정도로 독특한 면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제는 그 독특성의 기원과 성격을 따져 볼 때다.

3. 「휴전협정」과 작전지휘권

한·미 군사 관계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것이, 분단 상태에서 미국이 남한의 친미 군부를 동원하여 북한과 끊임없는 대결을 추구하는 사실에 있음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미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근거에서 밀받침하는 것이 바로 미

주15) 한겨레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분과, 「한미연계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관계의 성격」, 1988, 18-19쪽.

한국, 미군주둔비 연 20여억\$ 부담

「미군용시설 무단출입금지」. 전국 120개에 달하는 주한미군부대 어디를 가나 담벽 곳곳에 이같은 팻말이 영문과 한글로 나붙어 있다.

주한미군의 각 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 땅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각종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치외법권지대다. 이런 땅이 남한 전체면적(3백 억평)의 0.33%에 해당하는 1억평이나 된다.

이땅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즉 미국 정부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 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경우 얼마나 될까. 국방부는 1억평에 대해 임대료를 받을 경우 연간 10억 5000만 달러(87년 말 기준) 상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당 연간 임대료를 10달러(한화 7천원 상당)정도로 계산한 셈이다.

나름대로 계산기준이 있다지만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미8군사령부가 차지하고 있는 1백만평이나 미육군 34지원단(속칭 '하야리아'부대)이 있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및 연지동 일대의 16만여평 등은 대도시 지역의 금싸라기 땅임을 감안하면 너무 헐값으로 계산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 더구나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나 교통방해 등 시민들이 보는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는 느낌이다.

어쨌든 이같은 토지제공을 비롯, 카투사 근로자 등 인력지원, 한미연합사 등에 대한 운영비지원, 한미연합 방위증강사업(CDIP)지원, 군수지원, 훈련장 사격장 등 시설제공, 각종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혜택 등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하면 87년 한해동안 19억 610만 달러 상당을 주한미군에 지원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산. 88년에도 지원내용에 큰 변화는 없으나 토지임대료인상,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방위비분담문제가 집중 논의되기 시작한 88년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22억 195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이 바로 최근 한미간에 본격화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의 현주소다.

그동안 이 정도의 개괄적인 지원내용조차 정부는 공개를 꺼려오다 88년 5월 제 20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SCM)직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국방부관계자들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미국측에 대해서는 되도록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야 하는 반면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대미감정을 고려, 되도록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고 실토했기도 했다.

미국측은 지원내용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직접 지원이 아닌, 토지 제공 등 간접지원 형식이라는 사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미국측은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87년 한해동안 10억 2100만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측의 부담액수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일본과 서독정부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자국군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을 정도”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분담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8년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연합사권물을 한국정부가 지어

무상제공했으며 운영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는 한국이 이미 76년 무상군사원조 대상에서 제외된 뒤이고 유상원조인 FMS(해외군사판매) 차관단을 받는 시기였다.

현재 연합사의 운영비는 한미합의각서에 의해 시설유지비 사무용품비 사무기기비 자동자료처리비 등을 한국 38%, 미국 62%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연합사소속 장병들의 봉급 등 기타비용은 한미양측이 각자 분담하고 있다.

한미양국군이 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의자 책상 캐비닛 등 지급품을 한국군은 국산품을, 미군은 미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군 간에 사소한 ‘자존심 싸움’도 가끔 벌어진다. 한 한국군 영관 장교는 “어느 사무실에서는 미국 병사가 어느날 갑자기 바닥에 깔린 한국산 카펫을 미제 카펫으로 바꾸어 깔아놓아 한미 양쪽 군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연합사 창설에 따른 비용분담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서 어찌면 당연한 일인만큼 양국간에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86년 FMS차관마저 완전히 끊긴 뒤 87년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 압력을 가해오면서 한미 양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을 겪고 있다.

말하자면 ‘무역마찰’과 같은 ‘방위비마찰’인 것이다. 87년 5월초 ‘워싱턴’의 미국방부에서 열린 제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역설, 연합방위증강 사업 등에 한국측이 보다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88년 6월초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SCM에서는 방위비 분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액수가 가장 큰 초점으로 대두돼 열띤 협상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이들간의 협상에서 결국 한국측이 △연합방위증강 사업비로 89년부터 91년까지 3년동안 매년 4000만 달러씩 △동북아주둔 미해군 항공기에 대한 정비지원을 89년 한해동안 500만 달러상당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당초 연간 3400만 달러이던 한국의 CDIP지원비를 6000만 달러로 대폭 늘리고 신설되는 미해군 항공기에 대한 정비지원을 연간 2000만 달러상당 부담토록 요구했었다.

특히 미해군항공기에 대한 정비지원 문제는 미국측이 당초 ‘페르시아’만 사태와 연계시켜 요구할 것으로 사전에 알려져 많은 논란을 빚었다. 미국측은 한국이

‘페르시아’만 석유수송로의 이해관계국이라는 구실을 내세웠으나 ‘이해관계국이 한국뿐이냐’는 우리측의 항변 앞에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측은 ‘한반도 방위에 직결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 동북아주둔 미해군항공기에 대한 정비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방위비분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을까. 6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적으로는 ‘세계경찰국가’로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수호자’로서 자유세계의 ‘슈퍼 파워’임을 자랑해왔던 미국이었다.

그런 미국이 80년대 들어 다급하게 된 데는 최근 계속돼 온 무역 및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국방비의 대폭삭감, ‘페르시아’만 사태와 같은 지역분쟁 개입에 따른 안보부담 과중 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약화와 일본, 서독 등 동맹국들의 경제력 부상은 미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높여 주었다.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방위의 짐을 혼자 떠맡아야 하는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동맹국들을 위해 지출하는 방위비 규모(방위비 전체의 60%)와 맞먹는다는 계산은 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즉각 의회의 국방비 삭감압력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1월에는 하원군사위 산하에 ‘방위분담 소위원회’가 설치돼 동맹국들의 방위비분담 실태조사에 나섰다. 행정부도 국방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연구단을 구성, 순방외교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세계전략적 차원)의 방위비분담 개념을 확대적용하는 추세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작년에 제기된 바 있지만 ‘필리핀’에 대한 경제원조에 한국이 참여토록 요구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더욱이 미국의회에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문제를 방위비분담 압력의 카드로 사용하는 ‘최후수단’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4년 상정됐던 ‘샘년’수정안이 대표적인 경우. 그 주요내용은 ‘NATO회원국이 전년대비 3%씩 군사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유럽주둔 미군을 매년 3만명씩 감축시킨다’는 것.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지금도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하원은 88년 4월에도 91년부터 해외주둔 미군의 조건부 단계적 철수안을 240대 120으로 부결시키긴 했으나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359대 0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학자들은 방위비분담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안보상 이익을 받는 만큼 분담해야 한다는 ‘이익의 원칙’과 경제력에 비례해 분담해야 한다는 ‘지불능력의 원칙’이 그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익의 원칙’에서 볼 때 현재의 방위비 분담규모가 적다는 주장인 반면 한국은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일본 서독 등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입장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올해 SCM에서 격론이 예상되는 문제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수와 주둔국의 방위비분담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4만 3000명에 22억 달러(88년), 일본이 4만 5000명에 25억 달러(88년), 서독이 24만명에 연평균 50억~60억 달러선이다.

‘안보무임승차’는 한미연합 방위체제에서의 우리의 발언권 신장에도 지장을 준 다지만 방위비분담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다.

거세지는 방위비 분담 압력

“장군, 한국은 매년 6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국방비를 들여 방위해 주는 명칭한 짓을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소.”

90년 2월 어느날 TV저녁뉴스 시간에 방영된 미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의 한 장면이다.

한 민주당의원은 증언석에 앉은 루이스 메네트리 한미연합사령관(육군대장)에게 오른손 검지를 손가락질까지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지난 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0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가 미국측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 이것은 벌써 3년째 주한미군 문제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회가 얼마나 강경한 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미의회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보호에 의한 ‘안보무임승차’시대는 지나고 정당한 몫을 지불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Burden Sharing)요구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부담액보다 크게 늘리라는 압력성 요구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연간 지원규모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88년 기준으로 약 22억 달러(1조 6000억원)에 달한다(89년 국방백서).

그러나 지원내용중 60%이상이 과거부터 미군에게 제공해오고 있는 토지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산한 것이며 여기에 훈련장 제공, 탄약저장관리 지원, 세금감면 혜택부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간접비 성격의 지원비가 19억 4000만 달러로 전체비용의 대부분(87.4%)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억 7000만 달러가 직접지원비 성격이나 이중 국방부에서 이미 매입해

미군에 제공한 개인소유 토지분에 대한 대여료 1억 7000만 달러를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예산에 편성,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지원, 시설과 장비의 운영유지경비 분담 등 연간 1억 달러(4.5%수준) 이하이다.

반면 미국측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운용비는 제쳐두고 1만 8600명의 한국인 고용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월급만도 연간 2억 3100만 달러(88년)를 지출, 한국내 재벌기업 수준의 고용효과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일부 의원들은 주한미군 유지비에 북한의 침공시 한국을 지원할 태평양지역주둔 미군비용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250억 달러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의 절대액수가 적다는 이유보다는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누적돼 온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예산삭감 및 무역역조현상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방위비

88년 주한미군 지원현황

(단위 : 달러)

비용요소	내 용	간 접 비	직 접 비
부 동 산 지 원	토지 시설제공	11억 9000만	1억 7200만
인 력 지 원	카투사 노무단 및 경제지원인력	3억 5030만	240만
운영유지비 지원	미군사지원단경비 한미연합사예산등		320만
CDIP 사 업	연합방위증강사업		3420만
군 수 지 원	탄약저장관리 유 류지원 용역비 등	2억 1200만	6540만
한국군시설제공	훈련장 사격장 항 공관제지원	1610만	
감 면 혜 택	관세 통행세 체신 및 공공요금할인등	1억 7420만	
소 계		19억 4260만	2억 7720만
계		22억 1950만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잭 N 메리트 미육군협회 부회장은 우선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방어를 위한 원조의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대미무역 흑자에 따른 무역불균형이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88년 제1회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최 '한미안보관계의 장래' 세미나).

즉 한국이 '방위비졸업' 단계에 있으므로 그동안 미국의 안보지원으로 이룬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따른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미국인들은 일본의 경우를 들고 나온다.

즉 일본은 일본인 고용원들의 월급(연간 560억엔 가량)을 포함해 주일미군경비의 절반을 직접경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측도 고용인력의 월급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90년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체니장관은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직접비 3억 달러에 추가로 미군고용인력 1만 3800명의 월급 2억 3000만 달러를 추가부담하는 등 직접비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압력에 대해 한국측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의 경우 국방비가 GNP의 1%, NATO국가는 3%인데 비해 한국은 6% 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국방비부담률이 미국과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서방동맹국 중 가장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다.

또 88년의 경우 주둔 미군에 대한 1인당 방위비 분담금이 일본 4만 3030달러, 서독 2만~2만 4000 달러인 데 비해 한국은 4만 5170달러로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측 입장에 대해 현재 미의회의 분위기는 총유지비 22억 달러중 간접지원비 19억 달러를 직접지원비로 지출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의회의 증액압력에 대해 한국은 이미 88년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89~91년 3년간 연합방위증강사업 지원비 연간 4000만 달러 증액에 합의해주었고 89년 제21차 SCM 때는 90년 방위비로 3000만 달러(약 200억원)를 추가 부담키로 합의해주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가기만 하는 인상을 주었다.

미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철군카드를 이용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확보해내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난해 2월 상원군사위에서 한국내 반미운동에 자극받은 범퍼스법

안(90년 9월부터 3년간 1만명 감축)이 상정되자 곧이어 성급한 철군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존 매케인의원의 '병력감축보다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년-워너수정안'(주한미군의 역할변화 및 직접비용의 한국부담증액 등 주한미군 장래변화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90년 4월과 11월, 두 차례 보고하고 주한미군감축 5개년계획 수립)이 89년 7월에 상원군사위에서 18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직접비용 부담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세종연구소의 박영규연구원은 "현재의 비용부담은 하한선이며 상한선은 미군 철수로 인한 전력차질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계산해 그 중간선에서 양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전력을 5년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52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연구 결과와 연계시켜 생각할 때 분담액은 총비용이 260억 달러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산술적인 계산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감군한다는 미국측의 강경입장에 대해 고등안 정부는 피동적 자세로 대응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역작용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감군제안도 고려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방위비 문제는 90년대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질적 양적변화에 중요한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현안이 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오관치 책임연구원은 "양국간에 장기적인 분담금 비율을 합의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논의만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핫 이슈’로 떠오른 4만3천명

서울 용산구 용산동. 남산 남쪽 기슭에서부터 이태원·삼각지를 거쳐 한강에 이르는 1백만평의 넓은 녹색지역.

이곳이 바로 ‘용산합중국’ 또는 ‘용산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한미군의 수도격인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속칭 ‘용산 미8군 지역’이다.

미군 당국이 흔히 ‘더 유에스 용산 컴파운드’라고 일컫는 이곳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캠프 코너. 메인 포스트에는 주한미군 사령부 및 미8군 사령부 외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들어 있으며 각종 위락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또 사우스 포스트는 골프장을 비롯, 학교·병원·주택 등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이며 캠프 코너는 사령부를 지원하는 보충대, 인사행정사령부,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한미군 4만3000여명의 병력이 바로 이 ‘용산’의 총지휘를 받으며 움직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용산’ 휘하에는 크게 나누어 동두천에 사령부를 둔 보병 제2사단과 오산에 사령부를 둔 제7공군이 있다.

주한미군은 1백개의 부대에 흩어져 있는 육군병력(제8군) 2만6000여명과 18개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병력 1만여명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국방부요원 5천400여명과 해군 및 해병대 행정지원요원 170여명이 주둔하고 있으나 전투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이들 주한미군 4만3000여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땅의 총면적은 거의 1억평(7만 3천여에이커)에 이른다. 이는 남한땅 전체(3백여평)의 0.33%에 해당되는 넓이다.

120여년 전인 1866년 대동강에서의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 격침사건으로 ‘적대적인 인연’을 처음 맺었던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본격적으로 ‘떨 수 없는 사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 무조건 항복을 하자 미군과 소련군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북한에 진주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맡음으로써 지난 45년간의 한미군사관계가 비롯된 것이다.

45년 9월 8일 미 제24군단과 7함대 병력을 태운 42척의 함정이 인천항에 도착했다. 그해 11월까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한의 각 지역에 배치된 미 제24군단 병력은 7만여명. 이때 미군이 일제시대 조선주둔 일본사령부로 사용되던 용산의 군사시설을 인수해 사용한 것이 주한미군과 용산의 인연의 시초가 됐다.

조선총독부가 있던 중앙청에 성조기를 게양한 미군은 당시 미육군 태평양사령관 맥아더장군의 '포고 1호'에 의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했다.

정부수립과 함께 모든 행정권이 미군정청으로부터 한국정부에 이양됐으나 국군에 대한 지휘권만은 이승만대통령과 하지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 잠정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잠정협정은 소련군이 북한지역에서 철수한 데 이어 미군이 이듬해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 500여명만 남긴 채 완전 철수하자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미군의 철수연기를 강력히 요청했던 이승만정권의 우려는 꼭 1년 뒤인 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현실화됐다.

미군은 다시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전에 참전하게 됐다. 단소장을 사단장으로 한 미 제24사단 병력이 일본기지에서 일차로 한국전에 배치된 데 이어 7월 9일 요코하마에 있던 제 8군의 선발대가 급파돼 대구에 주한 미8군사령부를 설치했다.

미8군사령부는 서울 수복후 종로구 동승동의 서울대문리대 교사를 전쟁중 사령부로 사용하다 휴전협정 직후인 53년 8월 15일 용산으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 직후인 50년 7월 12일 우리 외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흔히 '대전협정'으로 부르는 역사적인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 미군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해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 협정은 최근 '불평등 협정'이라는 이유로 개정압력이 높아져 결국 한미 양국 정부간에 협상이 시작된 한미행정협정의 전신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이승만대통령은 이듬해인 50년 7월 14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맥아

더장군에게 공한을 보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것이 그동안 몇 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져 있는 작전통제권으로 이어져왔다.

미군은 한국전쟁에서 3만3000여명의 전사자를 포함, 14만여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북괴군을 격퇴함으로써 한국과는 '혈맹관계'를 맺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연합방위체제의 기본틀 역할을 해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조인하고 1년후인 54년 11월 18일부터 이를 발효시켰다.

6·25전쟁이 끝났을 무렵 한국에는 미군이 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등 모두 32만여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북한에서 중공군이 철수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2개 사단만 남기고 단계적 철수를 시작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총격사건, 린치사건 등 미군병사들의 탈선사건이 빈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미군범죄에 대해 미군당국의 배타적인 재판권 등을 규정한 대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시위와 여론들이 들끓었다.

결국 66년 7월 9일 조인된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이 1차적으로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아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

68년 1월 21일 김신조(金新朝) 등 무장공비 31명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듬해인 1월 23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이후 정국이 대북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던 69년 7월 25일, 당시 닉슨 미국대통령은 '팜 독트린'을 발표, 한국정부와 국민을 불안속으로 몰아넣었다.

즉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말로 압축되는 팜 독트린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71년 3월 주한미군 보병 2개 사단중 제 7사단을 철수하고 제 2사단만을 남겨놓았다.

이와 함께 미국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돼 있던 미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한국군에 휴전선 155마일 방위임무를 모두 넘겨주었다. 다만 판문점 주변 경비만을 계속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龍山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닉슨에 이어 카터대통령도 77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주한 미지상군 철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그해 6월부터 8월 사이 1천여명의 지상군이 1차 철군을 했으나 당시 주한 미8군 참모장 존 K 싱글로브소장의 철군반대발언 파동 등 군부와 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상징적인 철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 76년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가 매년 한차례씩 실시되기 시작했고 78년 11월 7일 용산 영내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탄생했다.

주한미군은 45년 해방과 더불어 이땅에 첫 진주한 이후 이같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기본적인 사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으로서의 기능과 만약 전쟁이 재발할 때는 적을 격퇴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 등 4개의 사령부 밑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미8군 사령관이 내가지 사령관직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8군사령관을 '용산코멘더'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한미군은 45년 이땅에 첫발을 디딘 이래 △1단계(45~49년)는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군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했고 △2단계(50~53년)는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으며 △3단계(53년 휴전협정

이후 현재까지)는 평화유지기능을 담당해왔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방위능력 향상과 경제발전이라는 큰 소득을 가져다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국방비의 지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특히 80년대 들어 주한미군이 이 나라의 자주적 민주화에 끼치는 영향을 회의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함과 동시에 최근에 민주화 흐름을 타고 한미군사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사태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군의 출동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시각에서 싹튼 반미감정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비판적으로 보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12이후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집권한 전두환대통령의 '군사독재정권'을 미국이 계속 비호해온 데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주권침해'와 '통일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학가 및 운동권의 주장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의회와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쟁 자동개입 가능성과 방위비의 과중한 부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주장이 상당히 폭넓게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대두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미국내의 반한감정이 이같은 주장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여러가지 선언적 의미에서도 불구하고 '혈맹' 또는 '우방'으로서 미국이 자기희생을 통해 한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즉 주한미군은 양쪽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설명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분석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해여부에 따라 계속 주둔할 수도 철수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계속 주둔시킬 수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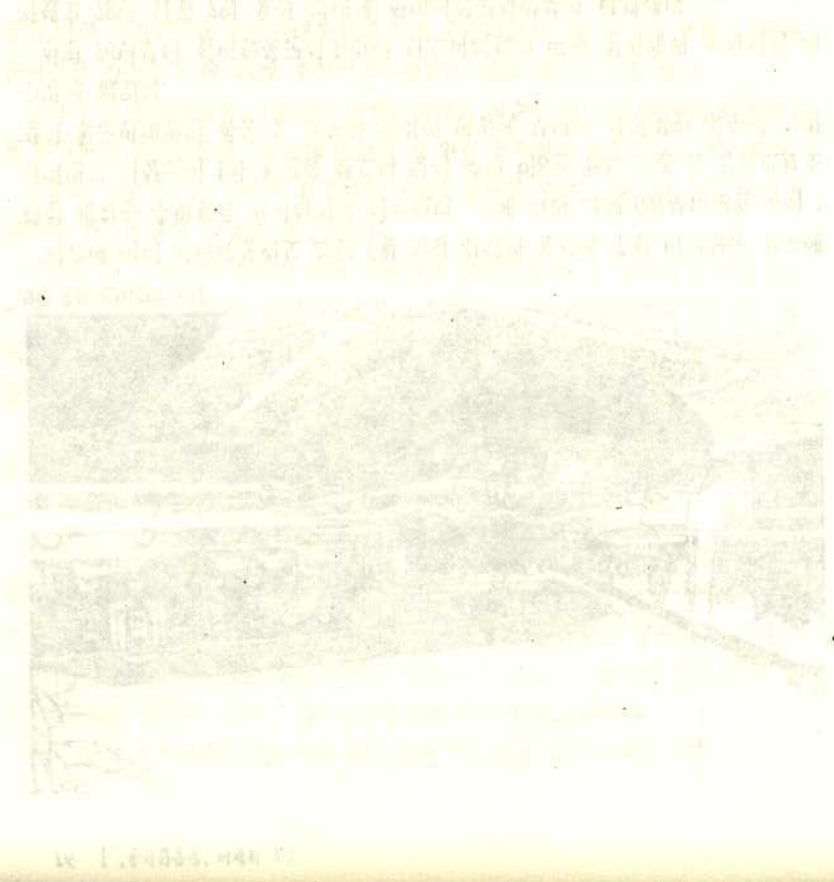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한미 양국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한국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 일관된 공식입장이다.

운동권 대학생들을 비롯한 일부 재야세력 또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미군

철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많은 국민이 지금의 한미군사협력관계는 불평등한 점이 적지 않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한미군 철수문제 이외에도 용산 미군시설의 교외 이전,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 개정, 작전통제권 이양, 방위비 분담, 핵무기 문제 등이 이미 양국 정부간에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한미간의 주요 관심사들은 주로 과거의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聯合司, 64만 한·미군 컴퓨터로 통제

‘평화수호의 보루’. 용산 미8군영내 한미연합군사령부(CFC) 건물 앞에서 있는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다. 지난 78년 11월 7일 연합사 창설 때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친필로 쓴 휘호다.

유엔군사령부도 함께 들어 있는 이 한미연합사 건물 앞 국기 게양대에는 태극기와 유엔기 성조기가 나란히 게양돼 펄럭이고 있다. 2층짜리 기와지붕에 콘크리트로 지은 연합사 건물은 창설 당시 한국정부가 지어 기증한 것이다.

연합사 1층 현관문을 들어서면 복도에 깔려 있는 카펫 중앙에 한미유대를 상징하는 연합사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1,2층의 복도 양쪽 벽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틱스피리트 훈련 때 등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벌이는 장면 사진이 내걸려 있다.

2층으로 오르는 중앙계단 옆 양쪽 벽의 한쪽에는 역대 사령관(미군 대장)들의 얼굴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부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얼굴사진이 각각 서로 마주보도록 걸려 있어 우호적인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또 1층과 2층의 사무실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복도에서 만날 경우 서로 목례나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보인다.

2층의 동쪽 끝에는 사령관실(201호)과 부사령관실(202호)이 맞붙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직과 미8군사령관직을 겸하고 있으나 연병장 건너 맞은편에 있는 미8군사령부 건물이 아닌 이 사무실에서 평소 집무를 한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미군측이 단독작전보다는 연합작전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미8군사령관 외에도 유엔군사령관, 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업무보고 의회증언 등으로 워싱턴에 갔다 오는 일이 수시로 있어 매우 ‘바쁜 몸’이다. 반면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은 연합

세계전략망과 직결된 龍山지하방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통하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가다보면 국방부 청사와 육군본부가 막 끝나는 지점에 조그만 네거리가 나타난다.

교통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양쪽 차도에는 편도 2차선 이외에 좌회전차선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곳을 남북으로 교차하는 도로가 용산 주한미군 시설로 통하게 돼 있다.

북쪽으로는 제5문(Gate 5)을 지나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메인 포스트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제10문을 지나 주거시설이 들어 있는 사우스 포스트로 이어진다.

용산 미군시설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20여개. 이중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의 정문격인 제5문과 제10문에는 보통 한국인 경비원 3명 정도가 지켜서서 디캘(출입증)을 검사한다. 가끔 미군헌병 1,2명씩이 추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곳을 통과해 영내로 들어가려면 ‘AB’ 등으로 쓰여진 차량출입증이나 개인출입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군부대 각 부서장의 보증에 의해 헌병대에서 발급받는 이 출입증은 일부 한국인 특권층의 고급자가용에 나붙어 ‘신분 과시용’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5문과 제10문을 들어서면 영락없는 미국 땅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8군로’ ‘1군단로’ ‘7사단로’ 등으로 명명된 비교적 널찍한 도로들이 시원하게 시야에 들어오고 가로등과 각종 양식의 지층건물들이 넓은 잔디밭 사이에 즐지어 서 있다. 그 사이사이 주차장과 도로 앞에는 갖가지 모양의 주로 외제승용차들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다.

군용 및 일반차량이 실세없이 오가지만 메인 포스트 영내에는 어느 교차로에도 교통신호등이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내 어느 곳보다 교통질서가 잘 지켜진다. ‘먼저 도착하는 차 우선 통행’과 ‘보행자 우선통행’의 미국식 교통법규가 원칙이

되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이다.

제 5문을 들어서면 곧 오른쪽에 링컨 케네디 등 전직 미국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통신소가 보이고 그 뒤 연병장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2층짜리 큰 건물이 마주선 채 나타난다.

그중 빨간 벽돌건물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가 들어 있는 곳이고 기와 지붕의 콘크리트건물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들어 있는 곳이다. 지난 78년 완공된 연합사 건물 앞에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친필로 쓴 '평화수호의 보루'라는 휘호가 새겨진 기념비가 서 있다.

8군사령부 건물 지하에는 최첨단 과학전자장비들이 구비된 병커가 구축돼 있다. 이곳에는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와 NATO 등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들과 동시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레이더통신 전자연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 관계자가 귀띔해 주었다.

두 사령부 건물 주변에는 크고 작은 참모부 건물과 영내거주자 숙소, 유엔군의 장대, 교회, 군사고문단, 한국경찰과견본부, 극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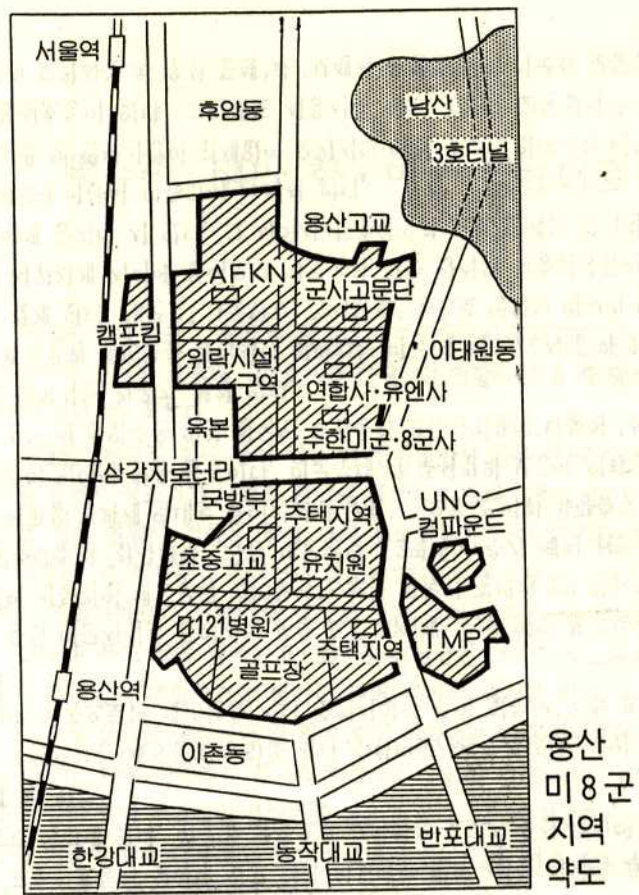
또 제 5문으로 들어서면 왼쪽에는 당구장, 탁구장, 전자오락실, 책대여소에서부터 도자기, 사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배우는 곳에 이르기까지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다. 그 옆에는 식당과 스텐드바, 나이트클럽 등이 들어 있는 메인 포스트 클럽과 대형 볼링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 일대 위락시설은 오후 5시 일과 후에는 미군병사들이 한국여자, 카투사 또는 가족 등과 어울려 성황을 이룬다.

밤에 이곳을 돌아다녀보면 "과연 이곳이 군부대인가" "이런 미군들이 유사시 전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이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한 흑인 병사는 "이곳은 후방이니까 그렇다. 전방의 야전부대로 가면 일년에 절반은 고된 훈련으로 보내야 한다"며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위락시설 부근에는 교육센터와 도서관 건물이 각각 서 있다. 교육센터에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교를 비롯, 센트럴 텍사스 대학·오클라호마대학·체프만대학·트로이주립대학 등 5개대학의 학사 및 석사과정이 개설돼 있다.

학생들은 미군장병이 대부분이고 미군자녀와 한국인 중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펫, 화장품, 의류, 공예품 등 한국상품을 면세로 파는 '서울 프렌드십 아케이



용산 미8군 지역 약도

드'도 있어 많은 미군들이 애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동차 판매장, 군복판매점, 꽃가게, 술판매장 등이 늘어서 있다. 또 메인 익스체인지라는 상가에는 인형, 장난감, 전자제품, 각종 서적, 의류 등 없는 것이 없다.

남동동 방향의 언덕에는 한국인들의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는 AFKN TV방송국과 위성중계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제10문으로 들어가는 주거지역 사우스 포스트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관저를 비롯, 장교들의 관사가 여기저기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의 각급별 아메리칸 스쿨이 중앙의 넓은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곳곳의 언덕 위에는 고급식당들이 서 있고 종합병원 규모의 121후송병원과 치과병원, 대형 식료품상가(키미서리), 소방서 등이 도시기능을 더해주고 있다.

사우스 포스트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8만여평에 달하는 18홀짜리 골프장이다. 동작대교의 시내쪽 진입로를 가로막아 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해서 서울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이 골프장은 수준급은 아니지만 서울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다. 미군장병 이외에도 한국군장병 등 극소수의 지도급 인사들이 주로 미군들의 초청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 한국인 3백여명이 일하고 있는 큰 직장이기도 하다.

사우스 포스트에는 골프장을 비롯한 녹지대 덕분에 꿩 다람쥐 등이 야생하고 있다.

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들, 카투사, 한국인 근로자 등 총 2만여명의 삶의 터전인 용산 미8군지역은 용산이라고 불려야 어울릴 이방지대이다. 그 용산시가 88년 8월 한미 양국 정부간의 지방이전 합의에 따라 조만간 옮겨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 자리는 서울시민들의 공원으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전한다는 대원칙만 합의했을 뿐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는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90년 6월 25일 이상훈국방장관과 메네트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대상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서울북부지역 미군부대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용산의 사우스 포스트 일부 지역에 잔류하게 된다.

△기지가전은 96년말까지 완료로 목표로 하되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의 규모 변화에 따라 일정 및 규모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전장소는 앞으로 연합작전체계의 효율성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정확한 장소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국측은 토지소요를 최소화하고 건물 통합화 등을 추진해 비용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다.

△용산 미8군골프장은 현 남성대지역에 건설중인 대체골프장을 미국측이 인수

한 후 91년 3월 폐쇄하고 용산골프장내의 시설을 제거, 이전한 뒤 국방부측에 반환한다.

메네트리사령관은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을 후임 사령관에게 미루려고 계속 기대해오다가 기지가전문제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임하기 하루 전인 6월 26일 각서를 체결했다.

육군 2사단, 남침로 지키는 '인계철선'

관측소 올렛-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최전방에 있는 주한미군의 2개 초소(GP) 중의 하나다. 이곳에 근무하는 토머스 슬래보다병장(24)은 미2사단 506보병 제 1 대대 B중대 2소대소속 저격병이다. 조준경이 달린 M21소총을 들고 하루 8시간씩 북쪽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다. 올렛 바로 코밑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간다. 분계선 건너 북한군 초소가 손에 잡힐듯 가깝다.

미2사단측의 안내를 받으며 올렛을 찾은 것은 89년 1월 11일 오전. 판문점으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자유의 다리'를 건너 북쪽으로 난 외길을 차로 달리니 곧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철문이 나온다. 그 문을 통과해 눈덮인 황량한 겨울 벌판을 양쪽으로 보며 차로 10분 남짓 더 북쪽으로 달리니 왼쪽 편으로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나고 언덕 위로 진눈깨비 바람 속에서 필러이는 성조기와 관측소 망루가 눈에 들어온다.

원래 해군장비인 고성능 관측경이 잠망경처럼 설치돼 있는 망루는 작은 요새였다. 망루 안벽에는 '북한군 차량 식별표' '계급 및 군복 식별표' '주간관측지침' 등 근무수칙 등이 가득 붙어 있다.

"주간관측지침=관측경으로 20분간 계속감시, 10분 휴식. 의심지역, 침투대상 지역 집중 감시..."

흔히 대하는 미군들처럼 슬래보다병장은 키가 크고 해맑은 얼굴이었으나 추위에 튼튼 손이 유난히 거칠어 보였다.

-고향이 어디인가.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시다."

-이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나.

"그렇다. 고향의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카드와 비스킷, 스웨터, 양말을 선물로 보내주었다."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직업군인이다. 어느 곳이든 명령을 받아 배치된 곳이 나의 최상의 근무지다."

-보람을 느끼는가.

"나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

슬래보다병장. 그는 남북분단 현장인 서부전선 방위를 맡고 있는 주한 미제 2사단의 1만7200여명의 미군중 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의 분단의 상처 바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왜, 어떻게 와 있는가.

오늘날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일한 미지상군으로서 2사단의 역할과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다.

좁게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것은 북한의 무력위협에 대한 억지력 또는 방위력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또 더 넓게 보면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첨병이기도 하다. 미2사단은 편제상으로는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태평양지구 총사령부(CINPAC) 산하에 있으며 CINPAC의 전략수행(對蘇전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먼저 미2사단을 미국의 한국방위라는 보다 좁은 시각에서 보자. 미2사단은 주한미군(8군)의 주력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육군전투사단이다. 병력규모는 1만7200여명이지만 2000여명의 카투사를 빼면 순수 미군병사는 1만 5200명 정도. 전체 주한미군의 약 40%에 해당되는 병력이다.

미2사단은 이른바 웨스턴 코리도(Western Corridor)라고 불리는 서부전선의 주요 통로를 지키고 있다. 개성-판문점-문산-서울로 이어지는 이 통로(回廊)는 6·25때 북한군의 주요 침공로였으며 만약 또다시 북한군이 남침한다면 그때도 이 길을 따라 침공해올 것이 틀림없다.

미2사단 병사들은 이 웨스턴 코리도를 하이웨이 원(1번 고속도로)이라고도 부른다. 유사시에 적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듯 순식간에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인 지도 모른다. 개성에서 미2사단사령부가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6km인 것을 감안하면 과장된 표현만은 아닌듯 느껴진다.

미2사단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축선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 미2사단은 휴전선 155마일중 서부전선 20km의 방위를 책임졌으나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지난 71년 3월부터는 서부전선 방어지역 대부분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판문점을 낀 동서 1마일 정도의 전선만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서부전선 1마일'이 남북 양쪽에는 사활이 걸린 지역이다.

미2사단의 전쟁역지 역할은 소위 '인계철선'(tripwire)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인계철선은 선만 건드리면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는 일종의 덫. 북이 무력남침으로 미2사단(線)을 건드리면 미국은 자동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덫)에 개입된다는 것이다. 미국내의 일부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은 바로 이 점을 걱정한다. 미지상군(2사단)이 '불모'가 돼 휴전선에 있는 한 미국은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역지력을 갖는다면 그 대부분이 미2사단의 '인계철선 역할'에서 나오고 있다.

미2사단은 모두 3개 전투여단과 1개 포병사령부, 1개 전투지원대, 사단지원사령부 등으로 편성돼 있다. 사단지원사령부는 미육군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미2사단은 동두천, 의정부, 문산지역을 중심으로 총20여개의 캠프(基地)에 분산, 주둔해 있다. 이 캠프들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미2사단이 맡고 있는 동서 1마일의 방어선을 마치 밑에서 받치고 있는 부채꼴 형세로 포진해 있다.

미2사단의 중심화력은 3개 여단에 나뉘어져 있는 8개 전투대대와 1개 포병사령부(3개대대)로부터 나온다. 이 8개 전투대대는 3개 보병대대, 2개 기계화보병대대,

2개 기갑대대, 1개 항공대대로 돼 있다. 어느 대대나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정예부대다. 기갑대대의 경우 한국군에는 없는 M68탱크가 있으며 항공대대에는 6H60 블랙호크 헬기와 스틱어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돼 있다. 또 포병대대들은 155mm곡사포와 8인치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MLRS) 등을 보유하고 있다. 155mm곡사포는 사정거리가 24km로 개성 이북까지 미친다.

미2사단은 항상 2개대대(겨울철에는 1개대대)를 임진강 북쪽 비무장지대에 투입해놓고 있다. 이 대대가 곧 인계철선의 제 1 선에 해당되는 셈이다.

미2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근거는 좁게는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약 제 4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호합의, 결정된 바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미2사단은 이 4조에 따라 한국에 와 있는 것이다. 적어도 표면적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2사단의 존재가 그 성격에 있어서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른바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식 조약이 아니다. 나토조약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 점이 보장돼 있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 3조는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이 있을 경우 양국은 서로 협의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돼 있다. 즉 북한의 무력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은 자동적으로 즉각 개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개입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런 점 때문에 흔히 본질적으로 '상황적 공약'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프랭클린 와인스타인교수는 안보공약을 '상황적 공약'(situational commitment)과 '비상황적 공약'(non-situational commitment)으로 나눠 설명하는데 '상황적 공약'은 '상황에 따라 지킬 수도 안지킬 수도 있는 공약'으로 정의한다. 반면 '비상황적 공약'은 '상황에 관계 없는 의지와 신념의 구현으로서 반드시 지켜지는 공약'으로 설명한다. 이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본질적으로 '상황적 공약'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 2사단(美地上軍)의 존재는 '비상황적 공약'에 속한다. 미지상군이 휴전선에 '인계철선'으로 실전배치돼 있으므로 미국이 전쟁에 개입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지켜지거나, 또는 지켜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비상항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2사단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 점에서 상충하고 있으며 그것은 미군철수는
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철수론자들은 미지상군(2사단)의 존재가 상호방위조
약의 상황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즉 미국의 전쟁개입 자유의지를 방해하기 때문
에 철수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철수반대쪽은 미지상군을 붙잡아둠으로써
상호방위조약의 이같은 취약성(상황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런 상충성 때문에 미지상군(2사단)은 한쪽에서는 극히 부담스러운 존재
로, 또 다른 쪽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미군철
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문제 등은 이런 상충성을 조정, 완화하는 방향
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밖에 미군의 한국주둔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4조)주
둔의 목적, 책임한계, 철수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점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
은 이 조약이 "한국전쟁 막바지에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미국과 그러한 미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있었던 이승만정부 사이에 맺어진 조약"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록 이 조약과 이를 기초로 한 한미동맹체제가 지난 40여년동안 한국
의 성장과 발전의 밑받침이 되어왔다고 해도 이제는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개정
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이 새롭게
규정된다면 그 존재적 표현으로서 미2사단의 성격과 역할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산 美7공군으로 북한공군력과 균형이뤄

지난 88년 10월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위치한 오산 미공군 기지내에서는 미공
군측 주최로 인근 송탄시 주민들을 초청한 축제가 나흘간 열렸다.

1년에 한 번 주민들에게 기지를 개방해 여는 프렌드십(우정)이란 이름의 이 축
제에는 하루평균 1만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석, 이국적 풍경과 정취에 흠뻑 젖
었다.

비록 정문에서 500여m 떨어진 축제광장까지만 출입이 허용된 '제한적 개방'이
긴 해도 평소 '한국속의 이국'에 대해 호기심만을 키워왔던 주민들은 미군병사들
의 환대속에 벌어진 이 축제를 통해 오산기지의 특이한 풍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축제가 열린 영내매점 앞 광장 한편에는 빈대떡, 불고기, 파전, 막걸리 등 토속
음식을 파는 간이 텐트들이 줄지어 늘어서 몰려든 주민들로 시끌벅적했고, 다른
쪽에서는 미공군 병사들이 대대별로 나와 음료수와 캔맥주를 서툰 우리말을 섞어
가며 팔고 있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야구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맞히면 물통 위의 나무다리에 앉
아 있던 미군병사가 물통에 빠지는 게임을 비롯, 서부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굽던지기 등 각종 게임과 여흥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축제에는 7만여 송탄시민 중 절반이 넘는 4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
고 미군측은 축제에서 남은 수익금 전액을 인근 18개 고아원에 기부했다. 미국적
인 개방성과 선의에 기반한 우호정신으로 기지촌 주민들과 미군이 서로 우정을
다질 수 있었던 한판 축제였다.

경기도 오산읍 200만평의 드넓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는 태평
양 지역에서는 미13공군의 본거지인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이어 면적면에서
두번째로 큰 기지이다. 이곳은 8천여명의 병력과 2200여명의 미군가족들이 살고
있어 1만여명이 거주하는 용산기지보다도 규모가 더 큰 또다른 '한국속의 미국'

이다.

한가운데 나지막한 야산에 밀집해 있는 7공군사령부 등 막사와 각종 군사주요
시설, 기지 북쪽에 위치한 2km의 활주로 및 격납고 외에도 이곳에는 아파트 병원
PX 도서관 은행 우체국 야케이드 골프장 오락센터 헬스클럽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영내에서의 자급자족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기지 한가운대를 관통하고 있는 브로드웨이로 명명된 중앙로를 따라 영문
간판을 단 이발소 미용실 잡화점 햄버거하우스 멕시코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어
외국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일쑤다.

15분 간격으로 송탄시와 기지안을 오가는 협진여객소속 시내버스와 용산을 30
분 간격으로 왕복운행하는 시외버스의 한글표지판이 오히려 낯선 느낌을 줄 정도
다.

디켈(출입증)을 가지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용산기지와는 달리 중요 군사시설
이 모여 있어 출입절차가 까다로운 탓으로 이곳에서는 한국인 근무자를 제외하고
는 민간인을 보기 어려운 것도 특색이다. 외부에서 민간인을 동행해 들어올 수 있
는 자격도 제한돼 있는데다 동행할 경우 상가지역 등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
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산기지는 또 4만여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관문'이다. 기
지 북쪽의 활주로 동편에 위치한 미공군수송사령부(MAC) 터미널은 말하자면 미
군용 국제공항인 셈. 이 터미널은 한국으로 배속된 군인 가족들과 일본, 유럽 등
지로 여행을 가거나 본국으로 귀국하는 미군들로 항상 붐빈다. 미공군 수송사령
부는 군수송기와 전세민간기로 오산과 전세계 미공군기지들이 기미출치립 인길
된 항공운송망을 치밀하게 운영하고 있다. 운송망의 다양함이나 운항횟수로 볼
때 어지간한 민간국제항공사 규모보다 크다. 이 터미널을 통해 한달 평균 2만여
명의 인원과 3천t의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산 공군기지의 의미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5공군과 필리핀의 클
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13공군과 함께 미국의 극동전략 방위망의 핵심
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 공군기지는 70년대이후 미행정부의 주한미군
감군정책과 80년대 들어 국내 대학가에서 비등하고 있는 철군 주장 속에서도 주
한미지상군과는 달리 비교적 '무풍지대'로서의 위치를 고수해 왔다. 오히려 철군



오산기지 인의 풍경

논의가 가열될수록 주한 미7공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격상된 가운데 전력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닉슨 미행정부가 주한 미7사단을 철수시킨 71년, 일본에 있던 51전투비행단이
오산기지로 이동 배치된데 이어 카터행정부 시절인 78년에는 F4전투기 12대가 대
구에 추가 배치됐다. 주한 미공군의 전력증강은 레이건행정부에 들어서면서 한층
가속화돼 지난 81년 F16 최신폭탄전투기가 미국을 제외한 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됐다. 또 82년에는 공군 근접지원기인 A10기의 수원기지 배치에 이어
86년에는 일본부둔 미5공군 산하에 있던 314비행사단을 7공군으로 편입시켜 한반
도방위망을 전담케 했다.

주한 미공군측은 또 오산과 대구에 배치돼 있는 F4전투기 24대를 89년에 모두
F16기로 교체했다.

이같은 주한 미7공군의 전력증강은 좁게 보면 북한의 공군력에 대비한 대응이
다. 국방부가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공군력은 전술기 820여대, 지원
기 780여대로 우리 공군의 전술기 480대, 지원기 690대에 비해 월등한 전력을 보
이고 있다. 이같은 남북간 공군력의 격차를 채워주어 남북 공군력이 밸런스를 이
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한 미7공군의 존재다.

군관계자는 "현대전은 바로 공중전이라고 할 만큼 공군력이 중요하다. 우리의

공군력에 미공군의 전력이 합쳐져 비로소 북한공군력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공군의 존재는 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위전략상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에 대응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에서 작전을 담당했던 모전직장성(52)은 "주한 미공군의 존재는 소련의 극동지역 진출을 봉쇄하면서 일본을 방위하는 전초기지인 한편 소련의 군사력을 극동지역에 붙들어매두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태평양공군사령부(PACAF) 산하의 3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은 전투기 370대, 기지 7개, 병력 2만8500여명이다. 이중 주한 미공군(7공군)이 갖고 있는 전투력이 전투기 144대, 기지 4개, 병력 1만5500여명인 것만 봐도 오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미공군측이 평가하는 7공군의 전력은 산술적 비중을 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6년 당시 태평양공군사령관인 배즐리대장은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으로 태평양공군의 임무는 한반도 방위의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 한국에는 미태평양 공군전력의 50%가 머물고 있다"고 미군 공식 간행물에서 밝혔다.

오산 공군기지에는 최고 최신의 첨단전자장비를 갖춘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외에도 미전략공군사령부(SAC)에서 파견된 U2정찰기 2대와 일본에서 파견된 RFI4C 정찰기 3대가 상주하며 정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지상의 골프공까지 식별해 낼 수 있다는 미국의 극비첩보기인 SR71기가 가끔 오산기지를 중심으로 정찰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71기는 오키나와에서 정기적으로 발진해 영상정찰을 실시해오다 89년 가을 미공군이 SR71기를 도태시킴에 따라 이제는 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E3A 공중조기경보통제기까지 가끔 오산기지에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한 미공군의 주된목적이 대북한 전쟁억지력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은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논쟁의 '무풍지대'라기보다 '휴화산'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앞으로 어차피 본격화될 주한미군 철수논쟁에서 미공군의 문제가 그 역할과 관련,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 공군관계자들은 양국 공군간의 협조가 육군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직장성 모씨는 "지난 76년 '8·18'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조차 않은 채 판 기지에서 발진한 B52폭격기 편대를 휴전선 부근까지 출격시켰다가 북한측의 긴급사과를 받고 귀환시킨 적도 있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최근들어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정보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되는 편이나 아직도 미공군측의 정보독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미공군간의 협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미군 당국자들 간에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한미군 간의 군사정보 협력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ROTC출신으로 8개월 전 첫 해외근무지로 오산에 배치됐다는 팀 베어대위는 기자에게 "한국내의 미군철수론은 소수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내 동료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미군장교의 말처럼 우리의 안보여건상 가까운 시일내에 지상군이 아닌 미공군의 철수요구가 쉽게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방부는 90년 1월 30일 경비절감을 이유로 주한미공군이 사용중인 5개 기지중 대구·광주·수원 3개 기지를 철수해 오산 및 군산 2개 기지로 통합하고 기지통폐합에 따라 남게 되는 비전투요원(행정·정비 등 지원요원) 2000명을 감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방부는 통폐합 및 인원감축이 90년 10월말부터 시작돼 92년 7월 완료된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적 자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미군기지 감량화 및 군살빼기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축소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주한미공군 전력의 전면감축을 예고하는 것인지를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앞으로 미군감축이 계속 진행되면서 주한 미7공군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극동군사정보의 집결지, 전술항공통제본부

지난 89년 1월 21일 오전 우리의 서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에 소련의 AN26 정찰기와 TU16전폭기편대 등 10여대가 돌연히 출현, 정찰활동과 공중급유훈련 등을 벌였다. 한소경계인 간의 상호교류와 남북대화무드로 한반도가 화해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영공에 바짝 접근, 공중급유까지 해가며 벌인 소련기의 때아닌 공중활동은 한미양측 군사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족한 것이었다.

한미군 당국은 소련기들의 움직임에 처음부터 오산 미공군기지내의 전술항공통제본부(TACC)에서 손바닥 보듯 낱알이 파악하고 있었다. 소련기들이 이날 하바로프스크 부근 후아렌코기지에서 발진, 북한영공을 통과해서 서해상에 나타나기까지의 움직임은 이미 전술항공통제본부의 레이더망에 처음부터 포착돼 상황실내 대형 스크린에 낱알이 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해역과 만주 연해주 중국 동북부지역이 그려진 전술항공통제본부 상황실내의 가로 5m 세로 8m가량의 백색 스크린에 북한영공을 통과한 소련기 비행편대가 서해 상공으로 들어서면서 점차 남하하는 것이 포착되자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지하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스크린에 마치 잠자리매처럼 무리지어 화살표시로 나타난 소련기편대는 이미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소련기편대가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선 것을 스크린 앞에서 단말기 스크립과 스크린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 한미양측의 작전상황장교들은 비상행을 놀리 초계비행중인 연합공군 비행기와 각 기지에 비상대기중인 전투기들을 즉각 출격시켰다.

같은 시간 상황실 뒤편의 종합통제보고센터(MCRC)에서 스크립을 들여다보며 각 지역을 분담해 관찰하던 요격관제사들은 출격한 한미공군 전투기들의 조종사

들에게 임무 고도 속도 무장상태 등을 지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스크린 상에는 역시 각지에서 대응출격한 한미공군기 20여대의 모습이 잠자리매처럼 나타났다. 결국 방공식별구역 부근에서 소련기편대와 한미공군기들이 마주쳐 뒤엉킨 상황이 스크린에 다섯 번이나 더 연출된 뒤 이날의 상황은 마무리됐다.

마치 '벌들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이같은 상황은 공상과학 영화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산의 전술항공통제본부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장면들이다.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공군기지는 넓게 보면 미공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공군기지(에어 베이스)들 중의 하나이나 기능면, 즉 전술적 중요성에서 보면 결코 단순한 기지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지안에 자리잡고 있는 전술항공통제본부 때문이다.

오산기지내의 지하에 설치돼 있는 이 전술항공통제본부는 외부가 위장돼 있어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기지내에 자리잡은 야트막한 야산 중턱의 한쪽 언덕 경사지에 몸을 기댄 채 기지 남쪽의 활주로를 내려다 보고 있는 육중한 콘크리트 벙커가 바로 한미연합공군의 '눈'이요 미국의 극동방위망의 '신경중추'로 불리는 전술항공통제본부다.

베일에 가려져온 이 극비시설은 야산에 면한 두꺼운 콘크리트지붕 위에 흙을 덮어 잔디밭으로 위장한 데다 지상으로 3분의 1쯤 드러난 삼면의 벽마저 녹색페인트로 칠해진 채 위장망이 드리워져 있어 얼핏 전방사단의 위장진지쯤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벙커야 말로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그 내부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각종 최신 최고의 극비전자통신시설과 최첨단 과학장비들로 채워져 현대공중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방위망과 연결돼 한반도와 주변일대를 커버하는 24시간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이 벙커는 나토의 전술항공통제본부와 규모가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한미연합군의 '눈과 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반도와 주변해역뿐 아니라 소련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부지역의 모든 비행물체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항공통제본부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 벙커상황실을 '전선 없

는 '최적적지역'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은 첨단조기경보체제가 없다면 한미양군은 유사시 눈을 가린채 전쟁을 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이 시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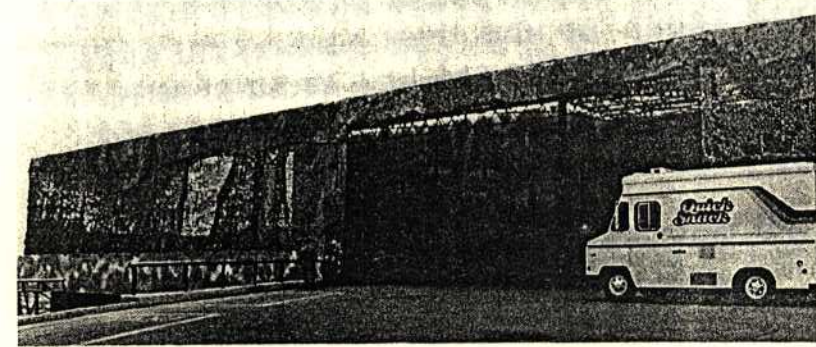
또다른 한 관계자는 지난 88년말 발표된 우리 정부의 '국방백서'를 인용, "주한 미군을 합쳐 북한의 70%에 못미치는 우리의 전력상 열세를 이같은 첨단 조기경보시설이 얼마만큼 상쇄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술항공통제본부는 지난 81년 한국측이 외부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미국측이 최첨단 전자장비를 제공해 만들어진 뒤 한미합동으로 운영돼오고 있다.

이 시설의 최종지휘자는 한미공군구성군사령관인 주한 미7공군사령관. 이곳과 지하통로로 연결된 한국 전투작전정보본부(KCOIC)에도 유사한 시설이 한국측에 의해 최근 갖추어져 있으나 중요군사정보를 미국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 전술항공통제본부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군사정보의 집결지라고 서슴없이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술항공통제본부 지하상황실은 전국각지의 고정 및 이동 레이더망과 육군의 방공포부대 및 호크·나이키 미사일부대, 해군전함기지 등에서 보내는 모든 항공기관련 정보들이 컴퓨터로 자동처리돼 스크린에 나타나는 종합적인 상황을 보며 항공통제를 한다. 또 스크린 좌우의 상황판에는 미공군의 기상대대, 전자보안단, 전술정보단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야근 및 적기지의 기상상황, 적기의 국적, 기종, 고도, 속도 등이 그때그때 날날이 표시돼 즉각 파악이 가



전술항공통제본부의 크비방커 전경

능하다.

뿐만 아니라 미전술공군사령부 소속 첩보기인 U2기와 SR71정찰기가 촬영수집한 항공사진들과 스파이 위성의 자료들까지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산기지의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이같은 막강한 현대전 수행능력은 좁게 보면 대북한 전쟁역지력으로 작용하지만 넓게 보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을 겨냥한 군사적 포석의 의미가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주한 미공군 측은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존재에 대해 "북한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데다 합동전투개념인 현대적 공지전(Air Land Battle)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공군력의 강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우회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한 한국측 공군관계자는 "북한 전투기가 8분만에 서울 상공에 나타날 수 있는 안보현실에 비추어 전술항공통제본부 같은 조기경보체제는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이같이 막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경희대 김점근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한 미공군의 존재, 특히 전술항공통제본부 같은 시설은 중요한 대북한 전쟁역지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넓게 보면 대소 군사역지력과 일본의 방위를 위한 복합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와 있으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국익에 합치되고 있다. 공군은 특히 지상군과 달리 긴밀한 방어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술항공통제본부 같은 시설은 당연히 미국의 전세계전략망의 중요한 포스트일 수밖에 없다."

김교수는 "그러나 미군의 전술항공통제본부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역지력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대공방어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 전술항공통제본부가 철수할 경우 한국은 새로이 대륙을 감시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 시설을 대치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더 큰 문제가 남게 된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상황실에는 미국방부 및 전략사령부와 연결된 핫 라인이 설치돼 있다.

전세계를 커버하는 미전략공군사령부의 상황판에도 한국의 오산기지가 중요한

포스트로 나타나 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한국의 오산기지가 방어망은 일본과도 연결돼 있다. 70년대 한국의 공군에 긴급비상이 걸리자 일본전역의 공군기지도 비상이 걸려 일본 국회에서 "이러다 한국전이 발발하면 전쟁에 자동으로 휘말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화가 있을 만큼 이제 우리는 좋은 싫든 미국의 전세계 전략망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셈이다.

오산공군기지에서 만난 미군속 린다 월슨(42·여)은 "우리는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 왜 철군주장이 대학가에서 대두되는지 알 수 없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미군철수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실제 오산의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40대 미국여인의 진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안보현실과 이상의 딜레마 때문인 것 같다.

막강 7함대의 원격 임호받는 해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CNFK). 동두천의 보병제2사단과 오산의 제7공군기지로 대표되는 주한미육군 및 공군과는 달리 주한미해군 세력은 일반인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육군의 경우 2만6000여명, 공군의 경우 1만여명의 전투병력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비해 주한미해군사령부는 전투병력이 전혀 딸려 있지 않은 '껍데기 사령부'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한미해군사령부 예하에는 470여명의 미해군 및 해병대 장병이 배속돼 있으나 용산과 진해로 나뉘어져 지원 및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한미해군의 경우 '실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같은 실정을 반영이나 하듯 주한미해군사령부는 용산 미8군 영내에 있으면서도 '사령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

미8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 건물 한쪽 끝에 노란색 퀘셋으로 작은 부속건물을 지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2층짜리지만 사무실은 10개도 되지 않는다.

입구의 작은 출입문 옆 벽에 '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라고 낯설게 만들어 붙인 작은 간판으로 겨우 주한미해군사령부임을 알게 해준다. 그 밑에는 역시 조그마한 미해군 및 해병대 마크가 양쪽에 붙어 있다.

다만 입구에 서 있는 높이 4m가량의 이순신장군 동상과 파란색 바탕에 흰별 두개가 그려진 주한미해군사령관 기가 어떤 '믿음'을 주기도 한다. 해군사령관 기의 밑부분은 6·25전쟁 당시 큰 공을 세워 미의회가 주는 '명예훈장'을 받은 미해군장병 49명을 기념하는 받침돌이 떠받치고 있다.

해군소장인 주한미해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의 해군구상군 부사령관(사령관은 한국 해군중장)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주한미해군사령관은 그 예하에 전투병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이 없는 이름만의 사령관일 뿐이다.

바로 이 점이 결국 한국 해군중장(작전사령관)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해군 구성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미군장성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지상구성군 및 공군구성군 사령관직은 유사시 또는 작전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해군구성군 사령관인 한국 해군중장은 우리 해군병력 외에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미해군병력이 없는 것이다. 다만 서태평양지역을 맡고 있는 미7함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주한미해군의 실질적인 전투세력은 미7함대이나 그 실세를 한국에 주둔시키지 않음으로써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도록 장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제7함대의 막강한 세력을 보다 자의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과 미7함대의 지원과 협조는 긴밀하다. 미7함대는 비록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상시 우리 해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주둔'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 해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미해군의 연합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측 한 고급장교는 "육해공군 가운데 연합방위 체계가 사실상 가장 잘 돼 있는 분야가 해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것이 팀스피리트훈련을 포함한 연간 20여회에 걸친 크고 작은 연합훈련과 한반도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보여주는 '해상 시위'(Naval Presence)라는 것이다.

연간 20여회에 걸친 대잠수함전, 기뢰전, 상륙전, 특수전, 구조전 등 한미연합 훈련은 연합방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군사적 공백을 메워주고 유사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항모전투단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 해상무력시위를 함으로써 미7함대가 사실상 주한미군 세력임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7함대가 한반도 근해에서 해상시위를 벌인 예를 보면 △68년 1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때 항모 3척 △69년 4월 미군 EC121기 격추사건 때 항모 3척 전함 1척 △76년 8월 DMZ 도끼만행 사건 때 항모 2척 △79년 10월 '10·26'사건 때 항모 1척 △80년 5월 광주항쟁 때 항모 2척을 보냈었다.

이어서 86년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는 2개 항모전투단과 1개 전함전투단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는 더욱 늘어나 6월에 항모 엔터프라이즈호, 7월에 항

모 칼빈슨호 및 전함 뉴저지호,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항모 니미츠 및 미드웨이호가 해상시위를 벌였다.

물론 이같은 미7함대의 활동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서태평양지역 내지 전세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항모 2,3척(장기수리 등으로 변동 있음), 잠수함 15척을 포함한 각종함정 60~70척과 각종 항공기 약 440대, 그리고 해군병력 3만 8000명, 해병대 2만 2000명으로 구성된 미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橫須賀)를 모항으로 해서 하와이 서쪽의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작전해역으로 하고 있다. 미7함대의 임무는 △자유진영과 우의증진 △전쟁억지력 유지 △전쟁발발시 즉각격퇴 등이며 '평화를 위한 즉응전력'이 표어로 돼 있다.

실제에 있어서 미7함대의 가장 크고 중요한 구체적 임무는 소련의 태평양함대를 견제하는 일이다. 미해군은 소련의 지속적인 해군력 증강으로 이제 과거와 같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항모전투단을 중심으로 한 미해군에 비해 소련해군은 잠수함 및 수상전투함과 해상공격용 최신전투기 백파이어를 중심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캄란만 기지 사용권과 최근에는 북한의 남포항과 원산항 기항권을 얻어 이 지역 자유진영의 해상교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소련의 해군력은 그동안 계속 증강돼 한반도의 안전에 큰 위협요소로 등장했다. 소련해군의 태평양함대 전력은 항모 2척, 잠수함 98척 등 890척의 각종 함정과 해군항공기 560대로 수적인 면에서 미7함대를 훨씬 앞서고 있다.

또 남북한의 해군력을 비교(국방백서)하면 △전투함 170척 대 410척 △잠수함 0척 대 23척 △지원함 130척 대 200척 등 총 300척 대 630척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해군은 최근 잠수함 2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80년대 들어 한국형 구축함과 경비함이 건조돼 해군력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도 대북 해군력의 열세를 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으로서 육군 및 공군에 비해 미7함대에 대한 의존정도가 아주 큰 형편이다. 미7함대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

인 국면을 수세에서 공세로 대역전시킨 전통이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금도 미7함대는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상륙작전능력을 최대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유사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1800명 규모의 정예해병을 평상시 항상 출동 준비상태에 두고 있다. 이는 항모 중심의 강력한 타격능력과 함께 미7함대가 소련 태평양함대보다 질적우세를 유지시키는 주무기로 꼽힌다.

한국해군과 미7함대의 결속력 못지 않게 북한해군과 소련 태평양함대 역시 86년 10월 동해에서 최초로 해·공군 연합훈련을 실시한 이후 87년 10월에도 실시했으며 이 훈련을 정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88년 4월 초에는 소련항모 노보로스츠크호를 주축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소련 자체의 동해상 기동훈련도 찾아지고 있는 추세다.

말하자면 한반도 근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놓고 미소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형세라고 하겠다. 여기에 앞으로 중국과 일본이 가담할 경우 이 지역이 남북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게 대두되고 있다.

예비역 해군장성인 강영오씨는 최근 펴낸 그의 저서 '한반도의 해상전략론'에서 "한반도의 결정적 위기는 미7함대가 인도양 등 다른 지역의 사태에 깊숙이 개입돼 한반도 근해에 공백이 생겼을 때"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의 군사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해군력은 미7함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시하지 않으며 '바다는 미해군이, 육지는 우리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 실제로 이런 생각이 국방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NATO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제7함대를 대서양으로 빼돌리는 이른바 스윙(Swing)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유럽 우선주의'에 치우쳐 있고 실제로 대서양 함대(2함대)에 비해 7함대를 신에함정 배치 등에 있어서 덜 중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7함대의 존재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소 해군력 대치, 우리 해군과 미7함대와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해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군전력 향상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결고리 카투사

미2사단 제2공병대대 A중대소속 유훈수병장(24)은 한국인이면서 미군부대에 배속된 이른바 카투사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한미 8군에 배속된 한국군'(Korean Augmentation to The U.S.A Army KATUSA)의 한 사람이다. 그의 병과는 전투공병. 유사시에 적의 지뢰와 벙커를 폭파시켜 아군 주력부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의 기습공격 때는 지뢰를 묻거나 교량을 폭파시킴으로써 공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유병장은 지난번 '팀스피리트'훈련에도 참가했다. 동두천 대대본부에서 만난 그는 "공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투공병입니다. 폭파가 전공이고 건설은 부전공이지요"라며 웃었다.

전미육군중 최정예사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2사단에는 유병장과 같은 카투사가 2200명이 있다. 이 수는 전체 사단병력(1만7200명)의 12.8%쯤 된다. 물론 미 8군에는 유병장과 같은 전투사단 카투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용산 미 8군본부를 비롯, 부산 대구 등 전국의 8군 예하부대에는 통신 보급 행정 수송 의무 등 여러 병과의 카투사가 있다. 현재의 총 카투사수는 5800여명으로 미 8군 총병력 2만 6500여명의 약 20%에 해당된다.

카투사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가. 먼저 미 8군규정 600-2 제1장 6항을 보면 "...목적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방위능력 증진을 위해 미 8군에 한국육군 사병을 증원하는 것이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가져다주는 병력 및 비용의 절약뿐만 아니라 전쟁억지를 위한 한미양국의 협력 및 수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카투사는 한미간의 우정과 상호지원을 상징한다"고 돼 있다.

카투사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그 의도는 더 분명해진다. 1950년 7월 북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린 상황에서 유엔군이 참전한 가운데 아군은 부산을 사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미제 2사단은 부산방어작전을 돕기 위

해 8월 부산에 상륙했다. 그러나 병력은 부족했고 계속되는 전투로 사상자를 보충하기에도 애를 먹고 있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궁리끝에 한국장정들을 미군부대에 배속,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키 위해 이승만대통령과 서둘러 비공식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그해 8월 20일 처음으로 7천명의 한국장정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선발돼 미군부대로 보내졌다. 이들이 최초의 카투사였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과 함께 싸웠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52년 9월 카투사 수는 2만7000여명에 달했고 제2사단에만 2756명의 카투사가 있었다.

카투사는 결국 부족한 미군의 전투력을 보충해 주는 '실전력'으로서 출범했고 이러한 성격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흔히 카투사를 후방 미군기지에서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존재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카투사의 대부분은 실전투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사단 제2공병대대의 유병장의 동료카투사, 그리고 비무장지대 최전방초소 GP 올렛에서 만났던 김현우일병(제506보병 1대대 B중대), 미육군 유일의 실사격자인 2사단의 4PAPA 3포대에서 만난 김태수병장(24) 등 기자가 만났던 카투사들은 미군전력의 중요한 일부를 맡고 있었다.

실제로 전체 카투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0여명이 전투사단인 2사단에 배치돼 있고 2사단은 각급 부대의 모든 분대(7~11명)에는 반드시 1명씩의 카투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카투사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미 8군은 한국군무 1년이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로테이션제도가 있다. 따라서 1년마다 미군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를 대신해서 카투사가 부대기능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카투사는 또한 한국군과 미군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서 인식된다. 언어소통이 가능한 데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앞서 있기 때문에 한미 양측을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용산 미 8군본사 본부중대 교육지원대의 이규봉상병(24)은 팀스피리트 훈련 때 하와이에서 온 미제25사단 사단본부에서 안내병으로 일했다. 그는 사단본부를 드나드는 수많은 한·미 고위장교들의 의사소통을 책임지고 해냈다.

용산 제2공병단 본부중대 군종실에 근무하는 최용화상병(24)은 팀스피리트 훈련 때 미군들의 훈련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상문제를 해결해 준



미군과 담소 중인 미 2사단 소속 카투사 장병들

것을 잊지 못한다. 미군헬기들은 훈련중 파종해놓은지 얼마 되지 않은 밭인 줄도 모르고 착륙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마다 피해를 본 밭주인은 밭을 동동구며 카투사를 찾는다. 최상병은 이런 경우 더많은 보상을 받도록 해주지 못하는 게 항상 가슴 아프다.

이상병이나 최상병 같은 카투사가 없다면 해마다 10만여명의 미군이 참가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한미양군의 연합훈련은 여러 군데서 빼거리거리는 소리가 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카투사를 군사기능적인 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의 배움을 수 없는 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분단이후 한미관계의 밝고 어두운 역사들을 가장 피부적으로 보여주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카투사는 한미 양군관계에서 술한 신화와 상처를 함께 쓸어안고 있다.

제2사단은 요즘 '황일병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968년 당시 2사단 제38보병연대 2대대소속 카투사였던 '황 B J' 일병은 그해 7월 21일 비무장지대 순찰 도중 북쪽에서 날아오는 한 발의 수류탄을 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함께 가던 미군동료의 허리를 껴안고 언덕 밑으로 굴렀다. 그의 재빠른 행동으로 미군동료는 무사했고 그는 이 일로 미동성무공훈장을 받았다. 카투사가 받은 최초의 동성훈장이었다.

2사단측은 그를 찾아 다시 한 번 그때를 되새기고 싶은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주소도, 연고지도 남아 있지 않다. 이름도 '황 B J'로만 기록돼 있다.

회사원 박오씨(28)는 카투사 출신. 대학 2학년때 카투사 모집광고를 보고 응시, 85년 제대할 때까지 미 8군 제19지원사 제2병참단(서울)에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카투사시절에 대해서 "별로 유쾌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함께 근무했던 미군들과 적지않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고 심한 경우 주먹으로 치고 받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는 일등국민, 너희는 이등국민'식의 노골적인 멸시였다고 말한다. 그는 카투사라는 제도가 우리사회에 반미감정을 조장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이 두 경우는 매우 대조적이다. 황일병으로 대표되는 카투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의식구조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혈맹관계로서의 한미관계를 상징한다. 반면 박씨가 체험한 카투사는 대립·갈등하는 한미관계다.

80년대 카투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중 상당수는 박씨와 같은 얘기를 한다. 용산 미 8군에서 근무했던 회사원 이모씨(27·86년 제대)는 "육체적으론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 반미감정이 왜 일어나는가 매일 그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88년 12월 23일자 미 워싱턴 타임지는 올림픽이후 악화된 한국인의 반미감정으로 판문점에서 주한미군과 카투사 간에 충돌이 일고 카투사들이 학력이 낮은 미군병사들을 멸시하고 있어 한미 양군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군들은 현재 판문점에서 우방동료들보다는 북한군들과 더 사이 좋게 지내는 것 같다"고 한 미군장교의 말까지 인용보도했다.

과연 미군들과 카투사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돼 있는지, 카투사들 사이에 정말 이토록 반미감정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 8군에서 북부중인 현역 카투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언어장벽이 가장 큰 문제다.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한계가 있다. 또한 서로가 상대방을 마이너리티(minority)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호스트(host)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박용민병장)

"미군들은 우리에게 자신들과 똑같은 페이스를 요구한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언어도 안통하고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유훈수병장)

"카투사출신 선배들이 사회에 나간 뒤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2년동안 근무하면서 미군과 한번 싸운것 가지고 마치 미군과 평생 싸우면서 군생활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이규봉상병)

"때때로 미군과 다투기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극받고 성장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조금씩 극복해 가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다."(최용화상병)

카투사에 대해서는 미군쪽에서도 한 말이 많았다. 한 미 8군관계자는 카투사와 미군들과의 반목 불화는 카투사들의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우월감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거의 대부분 대졸이나 대학재학생으로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해 입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를 은연중에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미군을 멸시하는 경향까지 있다는 것이다.

카투사들의 우수성은 미군들도 인정하고 있다. 우선 카투사 모집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어렵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시험은 과목이 영어 국사 국민윤리 3과목인데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서점에는 카투사 시험대비 참고서까지 나와 있고 카투사를 위한 학원까지 있다. 1년에 1500명 내외를 뽑는데 평균경쟁률이 최소한 20대 1은 된다고 한 카투사는 귀띔했다. 따라서 카투사의 평균학력도 고학력이다.

미 8군측 통계는 전체 카투사의 90% 이상이 대학재학과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돼 있다. 학력만 높은 게 아니다. 훈련 등 병영생활에서도 미군을 앞서는 분야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미육군우수보병기장(EIB) 획득률이다. EIB는 전세계 미육군을 상대로 한 일종의 공인된 실력테스트이다. 사격 등 총33개 과목에 걸쳐 시험(측정)을 본 후 합격자에게 EIB기장을 주는데 지난해 경우 2사단내의 카투사들의 합격률이 39.8%로 미군의 합격률 13%를 크게 앞질렀다.

미 8군의 이 관계자는 "이느 집단, 그것도 군대라는 특수집단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특별히 미군이기 때문에 인이난다면 그것은 한미 양군은 물론 양군관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근행 / 환경운동연합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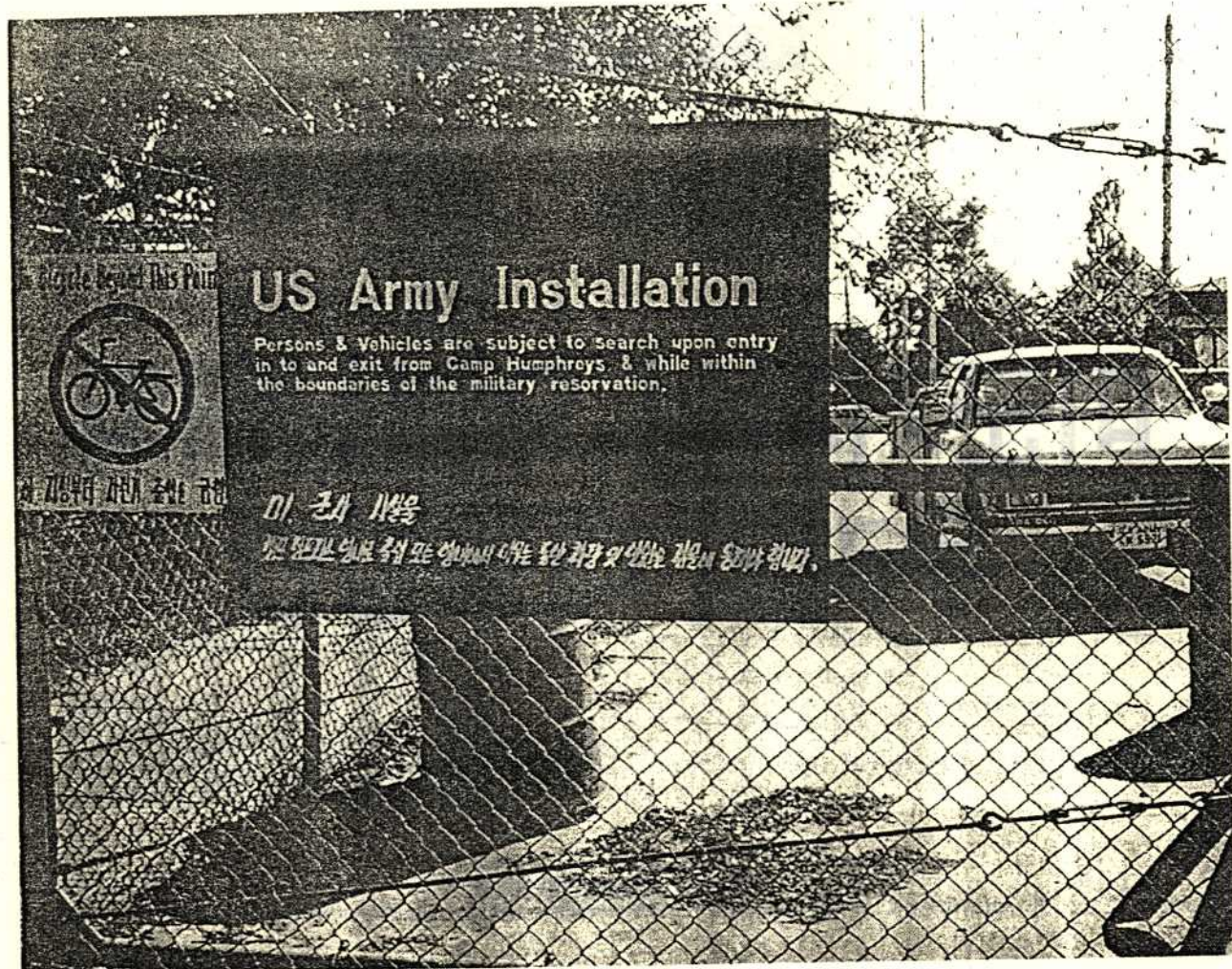
1. 전쟁과 환경파괴

오랜 기간의 냉전에 힘입어 미국은 전세계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더 이상 가상의 적을 만들기 어려워진 탈냉전의 시대변화와 미국 내의 재정 및 무역적자는 미국 국방부로 하여금 외국주둔군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1988년 이래 미국내 83개 군사기지가 폐쇄됐고 1백4개 기지의 규모가 축소됐다.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에는 모두 6백56개 시설이 폐쇄됐거나 폐쇄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철수는 군인과 무기를 속시원히 떠나 보냄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미국에 군사기지 땅을 내주었던 국가들은 미군이 남긴 유산

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미국은 그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이 미군기지가 남긴 유산이 바로 극도로 오염된 환경문제다.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기밀에 부쳐 쉬쉬하고 있던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군기지 철수로 드러나면서 오염된 환경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엄청난 복구비용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군사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지던 미군기지의 문제가 생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정복과 파괴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군대가 생존의 기본요건인 환경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전세계의 군대는 단일 조직으로서 지구의 가장 큰 오염자이다.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전에서 확인할



미군기지가 남긴 유산 중 가장 골치아픈 것이 극도로 오염된 환경문제이다.

수 있듯이 현대의 전쟁은 엄청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군대의 활동은 의식적인 환경파괴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평화시에도 군대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공기오염과 소음을 유발하며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평화시에도 무기생산과 실험, 군사훈련, 군사시설 설치와 유지활동, 군장비의 저장과 수송, 사고 그리고 노후 장비나 무기의 폐기 등을 통해 환경은 오염된다.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군대의 특성은 자원고갈을 부추기고, 특히 군사활동에 쓰이는 연료의 엄청난 소비는 가장 큰 환경 파괴이다.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국경을 넘어 전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구환경 파괴의

20% 이상이 군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치명적인 액체성 독성물질들의 폐기장으로 쓰인 군사기지들은 이제 서서히 작동하는 생명에 대한 시한폭탄과 같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연료와 페인트, 용제, 중금속, 살충제, 폴리염화비페닐(PCBs), 시안화물, 페놀, 산, 알칼리, 발사용 화약, 그리고 폭발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람이 음료수 섭취, 피부 흡수, 흡입 등을 통해 이러한 물질들에 노출되면 암, 기형아 출산, 염색체 손상 등이 유발되거나 간과 신장, 혈액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한다.

2. 필리핀 미군기지의 사례

'지구의 무법자'인 미군은 지구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며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나, 실제로는 지구의 뒷골목에서 평화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구의 문제아'로 성장해 그들을 받아들였던 국가들은 그 뒷치닥거리로 이제 골치를 썩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90년간 미국 공군의 최대 해외기지였던 클라크기지가 1992년 9월 16일 완전 폐쇄되었다. 같은 해 11월 24일 필리핀 수빅만의 미군해군기지도 완전 철수했다.

결프전 기간 동안 미군의 군수품 공급기지의 하나로 미7함대의 최대 병참기지였던 수빅기지는 필리핀 경제에 이득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88년 양국 정부에 의해 타결된 기지사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이 기지사용료로 연간 4억8천만달러를 지불해왔다. 이와 함께 이 곳에 주둔하던 1만여명의 미군이 쏟아붓는 달러 등의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임차기간 연장을 위해 계약갱신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안이 1991년 9월 필리핀 상원에서 부결되어 미군은 철수하게 되었고, 이로써 필리핀에는 외국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미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 진정한 독립은 미군철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1988년 기지사용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을 때 대다수 필리핀 국민들은 정부가 주권을 돈에 팔아 넘겼으며 레이테섬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폭파시키기도 했다.

필리핀 국민들은 미군을 쫓아냈지만 미군이 떠난 자리는 유독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를 계기로 잠재되어 있던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직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미국 당국의 기밀보고서를 통해 수빅만 기지와 인근 클라크 공군기지에 엄청난 양의 독성 폐기물이 버려졌는데도 미국 정부와 군은 법적으

로 이를 치울 의무가 없다는 점만 내세워 환경문제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 의회의 예산지출 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이 1992년 초에 작성한 「군사기지 폐쇄,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채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지는 미군의 연료와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오염됐으며 오염정도는 미국의 공해규칙 기준은 물론 필리핀 국내법상의 허용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클라크 기지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자료에서는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이 허용기준치 $10\mu\text{g}/\text{cm}^2$ 를 크게 웃도는 $13.2\sim 62.1\mu\text{g}/\text{cm}^2$ 로 검출되는 등 유독성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무기의 화력시험에서 유출된 연료와 화학물질, 불발탄 등이 땅과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거나 스며들었고 일반쓰레기와 기지 산업시설의 폐수로 수빅만이 크게 더럽혀졌다"고 오염실태를 밝히고 "특히 수빅만 기지의 선박수리시설과 발전시설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과 납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미 해군과 공군 당국은 이들 기지에 대한 정화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는 기지 이양에 관한 필리핀과의 협정에 정화조치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은 미군이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둔지의 환경정화에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십여년간의 군기지 정화작업을 토대로 매립지나 폭격훈련지역, 지하저장시설, 불발포탄산재지역 등 유해물질로 오염된 지역을 25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빅나 클라크지역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 전인 1992년 1월의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수빅만에 적어도 24개 지역, 클라크에 12개 지역 이상이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철수 후 충분한 조사를 할 경우 오염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수빅만의 오염문제는 이 곳을 상업항으로 개발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계획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상업항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철수 뒤에도

미군기지의 철수는 군인과 무기들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에 군사기지 땅을 내주었던 국가들은 미군이 남긴 유산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미국도 이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이 미군기지가 남긴 유산이 바로 극도로 오염된 환경문제이다. 정치적·군사적 문제로만 다루어지던 미군기지 문제가 생태위기까지도 초래한 것이다.

필리핀내 공항 및 항구 통과권을 갖기를 원하는 미국의 희망도 무산될 것이다. 필리핀 수빅만 환경오염은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문제가 기지 철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지로 사용하기 이전의 상태로 땅과 물을 살리는 데는 기지로 사용되었던 시간과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 천문학적인 환경복구비용

전쟁놀이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일례로 미국에서 기총소사나 폭격으로 파괴된 토지 1km²를 회복하는 데는 2억5천만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군대는 환경 복구에는 충분한 돈을 쓰지 않는다. 그 본보기로 미국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계획 예산은 1980년대 초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 1990년도에는 6억달러가 책정되었고 1991년도에는 8억5천만달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방위환경복구계획(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의 예산은 연간 군사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독성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군사시설 관련 지역의 수는 1986년의 5백29개 군사기

지의 3천5백26개 부지에서 1989년에는 1천5백79개 군사기지의 1만4천4백1개 부지로 급속히 늘어났다. 1백여개의 부지는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최우선 정화지역 목록'에 올라 있다. 1994년 3월까지 미국 국방부가 확인한 미국내 기지 오염지역은 1천7백22개 기지의 1만9천6백94곳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내 기지 폐쇄와 정화활동에는 78억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천여개의 부지가 결국 최우선 정화지역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 3월에 발표된 '방위환경복구계획' 연차 보고서에서는 재조정되거나 폐쇄될 미국내 군사기지 중 36개 기지의 9백5곳에 대한 정화비용이 1994년과 1995년 회계연도 동안 27억8천2백45만달러가 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9개 기지는 최우선 정화지역 목록에 올랐다.

미국 국방부의 외국 주둔기지의 오염정도는 비밀에 쌓여 있다. 1978년 해외기지 정화에 대한 대통령이 공표되었지만 국방부는 이를 위반하고 해외기지 정화를 위한 계획과 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 이탈리아, 영국, 옛서독 소재 미국 군사기지의 심각한 오염상태를 확인한 1986년의 미국 회계감사원의 한 연구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압력으로 발표되지 못했다. 1991년 가을에 완성된 회계감사원의 두번째 보고서

역시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또한 미군에 대한 철수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로 취급되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1년 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91년 8월의 회계감사원 보고서에서는 그 때까지 미국이 미군 주둔국으로부터 받은 환경오염 피해보상 청구는 1천2백59건에 2천5백80만달러에 이르며, 이후에는 3백여 오염지역에 대해 1억1천1백만달러에 이르는 정화복구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4. 우리나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3월 2일 국회 보사위에서 민주당 양문희 의원에 의해 정부기관 조사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가 밝혀져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천44평),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백19만평) 등 세 곳의 미군 철수 지역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토양 및 지하수(지하수는 채수관정이 있는 캠프 에임즈만 조사)중 유류, 카드뮴, 납, pH 등의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캠프 리비의 토양 오염도는 납의 경우 최고 1백43ppm으로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일반지역의 오염도보다 24배나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일반지역보다 7배나 심하게 오염돼 있었으며, 기지 근처 벼의 성장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리비는 땅속 깊은 곳까지 유류로 오염돼 있었고, 근처 농경지에도 기름띠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곳은 37개(개당 저장용량 31만갤런)의 유류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조선에서 공급받은 유류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통해 각지의 주한미군기지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다.

또 캠프 에임즈는 일반지역보다 납의 오염도가 최

고 6.1배나 높았고, 캠프 이즈벨은 납과 카드뮴의 오염도가 일반지역보다 각각 최고 9.5배와 4.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이들 지역은 1950년대부터 미군이 주둔하다가 199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철수한 유류저장시설로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하 저장시설에서도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보여 이들 시설로부터 유류가 장기간 누출될 경우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은 아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미 동군이 남양반도 앞바다 농섬을 사격장으로 사용하다 1968년 마을 한 북편의 농경지 38만여평을 수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의 미 제7공군 '쿠니' 사격장은 지난 40여년간 이 곳 주민들의 삶을 파괴해 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 상당수가 청각 장애를 앓고 있으며 가축이 유산하고 불발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집이 망가지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왔다.

주민들은 1989년 민주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격장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에 사격장 이전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년 가량 계속된 사격장 점거농성과 시위는 당시 온 국민에게 반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지만 사격장 이전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주민 대표들이 무더기 형사 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94년 12월에도 쿠니스격장에서는 화약 폐기물 처리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주민 2명이 다치고 주택과 공장건물 1백30여채의 지붕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후 미군 당국은 세입자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1백80여세대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세대당 3만원 꼴도 되지 않는 5백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한미행정협정(한-미 주둔군지위협정,